

國務調整室  
政策調整事例 第4輯

# 政策調整事例 綜合

- 2001. 9월부터 2002. 8월까지 -

2002. 9



國務調整室

# 政策調整事例 綜合

-2001.9월부터 2002.8월까지-

2002. 9

國務調整室

# 目 次

## I.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機能

1. 국무조정실의 기능 .....	9
2. 정부정책 조정의 중요성 .....	10
3.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 유형 .....	11
4. 정책조정사례집 발간 .....	13

## II. 政策調整事例 綜合

### □ 總括調整官室

○ 경찰 사기진작방안 추진 .....	19
○ 민간휴직제도관련 주관부서 지정 .....	20
○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문제해결 .....	21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관련 이견사항 조정 .....	22
○ 소하천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관련 이견사항 조정 .....	23
○ 테러방지법 제정관련 조정 .....	24
○ 군 비행안전구역 건축고도제한 완화 .....	25
○ 군인보험제도 개선 .....	26
○ 을지훈련기간중 주5일근무 시험실시 관련 부처간 이견 조정 .....	27
○ 사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28
○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	29
○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마련 .....	30
○ 2002 아시아대회 운영비 등 예산지원 .....	31
○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건설지원 .....	32
○ 월드컵기간중 수도권 자동차 2부제 시행방안 .....	33
○ 2002 월드컵 개최도시 문화행사 지원 .....	34

○ 월드컵경기 국가홍보 및 붐조성대책 조정 .....	35
○ 월드컵·아시아대회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설치 지원 ....	36
○ 아시아대회 광고기간 연장 지원 .....	37
○ 인천공항 입국자 휴대품 전수검색 .....	38
○ 천연가스버스 보급 촉진 특별대책 .....	39
○ 천연가스 이동식충전차량 도입방안 .....	40
○ 천연가스 고정충전소 설치관련 관계기관 의견조정 .....	41

## □ 經濟調整官室

○ 울산·온산 산업단지 주민이주사업으로 인한 채무부담 조정 ...	45
○ 국제선 구간중 국내구간 운항기의 외항기 자격관련 조정 .....	46
○ 신용금고의 점포신설에 대한 인가요건 완화 관련 .....	47
○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업무 추진체계 조정 .....	48
○ 복권시장 안정대책 조정 .....	49
○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조정 .....	50
○ 교토의정서 국회비준동의 관련 조정 .....	51
○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관련조정 .....	52
○ 생명윤리 관련 법률제정 업무 조정 .....	53
○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 관련 조정 .....	54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조정 .....	55
○ 경유 시내버스 공급중단관련 .....	56
○ 생물·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 .....	57
○ 채광·채석 복구비 확보 .....	58
○ 자연공원구역내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문제 조정 .....	59
○ 위성측위시스템(GPS) 운영협약체 관련 총리훈령 제정 .....	60
○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대책 재원분담방안 조정 .....	61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이견 조정 .....	62

○ 토지정보시스템 통합 .....	63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표준화분과위원회 구성방안 조정 ...	64
○ 캠핑용차량 관련 제도개선 .....	65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조정 .....	66
○ 활어 원산지 표시제 도입 · 시행 관련 .....	67
○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추진 관련 .....	68
○ 경부고속철도 운영준비조직 설치 · 운영 관련 .....	69
○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제의 등록자격 관련 .....	70
○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행관련 .....	71
○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추진 관련 .....	72

## □ 社會文化調整官室

○ 외국인력 제도개선 .....	75
○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 .....	77
○ 마약류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78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수립 .....	79
○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수립 .....	80
○ 식품의 항생제 내성균 저감화 대책 .....	81
○ 비브리오패혈증 등 발생대비 언론보도 및 홍보대책 .....	82
○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정부 단일안 마련 .....	83
○ 주5일 근무제 관련 정부 입법안 조정 .....	84
○ 주5일 근무제 실시 대비, 사전준비대책 수립 .....	85
○ 비상시 국가기간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 군인력 확보 .....	86
○ 납검출 수입수산물 처리에 관한 정부 대응방안 마련 .....	87
○ 자격관련법 통합 추진 .....	8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	89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관련 .....	90
○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관련 .....	91
○ 폐광카지노 관련 지방재정 확충 .....	92

## □ 審查評價調整官室

- 21C동북아 향만물류중심국 도약을 위한 향만정책 평가 ..... 95
- 벤처기업 육성시책 평가 ..... 96
- 초중등 교육정보화 추진실태 평가 ..... 97
-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 실태 평가 ..... 98

## □ 規制改革調整官室

- 대학원대학에 대한 규제내용 조정 ..... 101
- 간선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의무 조정 ..... 102
- 이동식 천연압축가스 충전소 시설기준 조정 ..... 103
- ISO 14001과 환경친화기업제도의 통합 ..... 104
- 산지관리법 제정 ..... 105

## □ 水質改善企劃團

- 세계 물의날(3.22) 행사 준비 ..... 109
- 통합정수장 건설비부담 개선 추진 ..... 110
- 환경기초시설투자 재원 조달방안 강구 ..... 111
- 영월댐 관련 주민지원대책 국비지원 조정 ..... 112
-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 ..... 113
-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면적 조정 ..... 114
- 국립공원구역조정 ..... 115
-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전기료 인하 ..... 116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관련 ..... 117

## □ 安全管理改善企劃團

-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 안전대책 수립 ..... 121
- 대형·고층건축물 등 안전관리대책 추진 ..... 122

○ 공동구 안전관리대책 추진 .....	123
○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배관 안전관리 강화 .....	124
○ 신종 자유 이용업 안전관리 대책 .....	125
○ 복합상영관 안전관리 대책 .....	126
○ 재난관련 신고전화 일원화 .....	127
○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등 안전관리 대책 .....	128
○ 학원등 수련시설 안전관리 대책 .....	129
○ 사업용 자동차 등 운행관리체계 사후관리 제도화 .....	130
○ 교통안전관련 각종 평가제 및 시상대회 개선 .....	131
○ 제3차 사고찾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관리강화 .....	132
○ 도로·교통 안전시설 일제정비 추진 .....	133
○ 화물자동차 과적운행 예방대책(단속 일원화) 추진 .....	134
○ 황사대책 추진체계 및 예·경보 시스템 구축 .....	135
○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 제도화 .....	136
○ 가스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부처별 안전관리 업무조정 .....	137
○ 긴급 신고전화 일원화 추진 .....	138
○ 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범위 확대 .....	139
○ 가스 안전관리 기준강화 관련 .....	140
○ 위험물질 운송관련 안전관리 강화 .....	141
○ 신종 자유 이용업 안전관리대책 추진 .....	142
○ 산림청 충청권 헬기격납고 설치관련 이견조정 .....	143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144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제도 등 개선 .....	145
○ 교통범칙금의 교통안전시설 재원화 추진 .....	146

# I .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機能



## 1. 國務調整室의 機能

-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내각통합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73년 2월1일 차관급 기관인 「行政調整室」로 설립되었으며, 98년 2월 28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長官級 기관인 「國務調整室」로 개편
  - 국무조정실의 각부처 업무에 대한 정책조정기능과 심사평가기능이 강화되었으며, 규제개혁기능이 신설됨
-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指揮・監督, 政策의 調整, 審査評價 및 規制에 관하여 國務總理를 補佐하는 임무를 수행 (정부조직법 제20조)

◇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기능, 심사평가기능, 규제개혁기능 수행 과정에서 조정된 사례를 종합하여 정책조정사례 제4집을 발간

## 2. 政府政策 調整의 重要性

- 정부의 主要政策은 관계부처 협의, 민간의견 수렴 등 多樣한 節次를 거쳐 決定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部處가 독자적으로 政策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정책추진과정에서 부처들은 각자 多樣한 公益을 대변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은 곧 협의과정이며, 이것이 民主主義式 意思決定過程의 핵심임
  - 이러한 과정에서 部處間 意見對立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행정의 專門性이 깊어지고 각종 이익집단 등의 참여가 활성화 되는 등 行政環境이 複雜・多岐化 해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임
- ⇒ ① 정부정책을 부처차원이 아닌 國家次元에서 다양한 공익을 均衡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 ② 정부정책의 一貫성과 효율적인 執行力を 확보하며
- ② 부처간 이견대립이 장기화되어 政策이 失機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의 調整機能은 무엇보다 중요

### 3.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 類型

#### (1) 차관회의를 통한 政策調整

□ 國務調整室長이 주재하는 차관회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각종 안건을 事前 審議하는 회의체로써 특히 法令案에 대한 異見調整에 중점

□ 차관회의를 통한 調整事例

▲ ‘환경개선비용부담금시행령’상 징수교부금 조정(02.8)

▲ ‘소하천정비법시행령’상 환경친화적 소하천정비 포함문제(02.5)

▲ ‘테러방지법안’상 테러개념 등 조정(01.11)

#### (2) 각종 委員會를 통한 政策調整

□ 각종 위원회는 국정의 많은 분야중 力點的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서, 關係部處가 많고 中・長期的으로 對應하거나 상황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목적이 달성 되면 廢止됨

○ 國務總理가 委員長인 위원회 : 총35개

○ 國務調整室長이 委員長인 위원회 : 18개

□ 委員會를 통한 調整事例

▲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 유치활동 추진방향 및 전략 마련, 회원국 요구사항 지원추진등 (01.2~02.6)

▲ 복권발행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복권시장안정대책 마련(02.6)

### (3) 關係部處 次官會議를 통한 政策調整

□ 부처간 이견사항중 政策的 決定이 필요한 사항 등은 國務調整室長 主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조정

□ 關係部處 次官會議를 통한 調整事例

▲ 외국인력제도 개선 종합대책 마련(02.7)

▲ 생명윤리법 제정관련 주관부처 등 조정(02.7)

▲ 교토의정서 국회비준동의 관련 조정(02.5)

### (4) 關係部處 實務會議를 통한 政策調整

□ 관계부처 이견사항중 實務的 判斷으로 협의·조정이 가능한 사안은 관계부처 局長會議, 관계부처 課長會議 등을 통해 조정

□ 關係部處 實務會議를 통한 調整事例

▲ 민간휴직제도 관련 주관부처 지정(02.5, 국장회의)

▲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관련 정부 단일안 마련(02.2, 국장회의)

▲ 월드컵기간중 수도권 자동차 2부제 시행방안(02.1, 과장회의)

▲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업무추진체계 조정(01.11, 과장회의)

### (5) 特定課題 評價를 통한 政策調整

□ 정부정책중 主要懸案課題 등을 선정,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關係部處間 異見을 調整

□ 특정과제 평가를 통한 調整事例

▲ 21세기 동북아 항만물류중심국 도약을 위한 항만정책 평가·조정(01.12)

▲ 벤처기업 육성시책 평가·조정(01.12)

## (6) 規制改革 推進過程에서의 政策調整

- 規制改革委員會의 규제개혁업무 추진과정에서 관계부처간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實務的으로 調整完了後 委員會에 상정
- 規制改革 추진과정에서의 調整事例
  - ▲ 대학원대학에 대한 규제내용 조정(02.5)
  - ▲ 간선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의무 조정(01.11) 등

## 4. 政策調整事例輯 發刊

- 이번에 발간한 政策調整事例는 지난 제1집(98.3~99.8), 제2집(99.9~2000.5), 제3집(2000.1~2001.8)에 이어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한 정책조정사례중
  - 비교적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조정사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한 것임
- 앞으로도 매년 이러한 政策調整事例輯을 발간하여 국무조정실의 政策調整機能 向上을 도모하고, 國務調整室의 調整機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음

## II. 國務調整事例 綜合

☐ 總括調整官室 ☐

☐ 經濟調整官室 ☐

☐ 社會文化調整官室 ☐

☐ 審查評價調整官室 ☐

☐ 規制改革調整官室 ☐

☐ 水質改善企劃團 ☐

☐ 安全管理改善企劃團 ☐

□ 總括調整官室 □

1. 과제명	경찰 사기진작방안 추진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통령 말씀(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한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함</li> </ul> </li> <li>○ 국무총리 지시(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치르면서 경찰의 노고가 매우 컸으며 월드컵이 끝나면 특진, 포상 등을 통해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할 것임</li> </ul> </li> </ul>
3. 과제내용 (경찰청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외 수당 추가 지급 : 추가소요 99억원</li> <li>○ 경찰인력 연차별 증원계획의 조기 시행 : 642명</li> <li>○ 일부 파출소장 직급 상향(경사→경위)조정 : 627명</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증원 문제는 필요성에 대한 현장확인, 파출소의 중·장기적 운영방향 등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 검토</li> </ul> </li> <li>○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요구시 가용재원을 고려, 검토</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6.28 일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자부·경찰청 실무관계관 참석</li> <li>- 행자부·기획예산처 진행사항 확인·점검</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인력 408명 연내 증원</li> </ul> </li> <li>○ 일부파출소장 직급 상향 209명</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경찰청직제개정안 개정(추진 중)</li> </ul>



1. 과제명	민간휴직제도관련 주관부서 지정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휴직제 실시와 관련 중앙인사위와 행자부간에 서로 주관부처를 주장하며 갈등, 동제도 시행 차질</li> </ul> </li> </ul>
3. 과제내용	○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의 주관부처 지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휴직은 민간기업에 휴직할 공무원을 선발하는 임용실무에 대한 것이므로 파견 등 다른 인사실무와 연계, 행자부에서 운영 필요</li> </ul> </li> <li>○ 중앙인사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개방형 직위’에 대응한 민간과의 교류이므로 민간유착 방지 및 공정한 운영 위해 중앙인사위에서 운영 필요</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5.7 총괄조정관 주재 조정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자부·기획예산처 관계 국장 등</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가지 대안을 제시, 양 기관별 수용의견을 제시토록 하고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우리실에서 조치</li> <li>&lt;제1안&gt; 현행과 같이 행자부에서 운영(민간휴직위원회 폐지)</li> <li>&lt;제2안&gt;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예: 위원장은 행자부 차관, 부위원장은 중앙인사위 사무처장 등)</li> <li>→ 제2안 수용</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임용령 개정(7.10) 완료</li> <li>-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행자부 예규)」 제정 완료(7.31)</li> </ul> </li> </ul>

1. 과제명	자치단체간 해상경계 문제해결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양시가 자치단체 구역에 바다도 포함되는지를 질의('01.5)</li> <li>○ 전남도에서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행자부·해양부에 건의('01.6)</li> <li>○ 해양부가 해상경계 설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방침을 확정하고 행자부에 공식입장 요청 및 실무협의 추진('01.6)</li> <li>○ 관계부처 협의 필요성 제기('02.3)</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검토 등</li> <li>○ 해상경계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시 관련법 개정예의 반영여부 등</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방법이 다양하여 실제로 경계를 획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li> <li>- 해상경계를 자치단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현재의 어업조정권 등 새로운 분쟁을 유발</li> </ul> </li> <li>※ 행자부는 바다의 행정구역 획정은 불인정 입장</li> <li>○ 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법」상 모호하게 되어 있는 자치단체간 해상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li> </ul> </li> <li>→ 분쟁현황 선진국 사례 분석 등 연구용역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자부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에 반영, 개정 추진</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5.14 일반행정심의관 주재 조정회의 개최</li> <li>- 행자부·해양부 관계 과장 등</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체계상 여러기관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불가하고, 행자부에서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기용역을 실시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여</li> <li>- 해양부에서 단독으로 용역을 발주하되, 행자부·국토지리원이 용역기관 선정 및 용역범위결정 등 발주단계부터 전과정에 참여, 협의 추진</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결과에서 합리적 대안이 제시될 경우 「지방자치법」 등에 반영(용역계약 진행 중)</li> </ul> </li> </ul>

1. 과제명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시행령 관련 이견사항 조정
2. 발굴배경	제34회 차관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
3. 과제내용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교부금은 실소요경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필요 (10% → 20%)</li> <li>- 징수한 부담금은 그 지역 환경개선사업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재원을 중앙정부-자치단체간 공동이용 필요</li> </ul> </li> <li>○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비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10%도 낮은 수준이 아님)</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8.28일 일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서울시 참가</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교부율은 현행(10%)대로 유지하되 재원의 공동이용문제는 국가재정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li> </ul> </li> </ul> <p>※ 제34회 차관회의(8.29)에서도 같은 취지로 의결</p>

1. 과제명	소하천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관련 이견사항 조정
2. 발굴배경	제19회 차관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
3. 과제내용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환경친화적 소하천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므로 시행계획 수립시에도 친환경적요소를 검토하기 위해 친환경적소하천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제5조의2 제2호 타목에 신설 필요</li> </ul> </li> <li>○ 행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으므로 시행계획시에는 친환경요소를 중복적으로 검토하여 추가비용 및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음(수용불가)</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5.7 일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li> <li>- 행정자치부, 환경부 참가</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하천정비시행계획수립시 중복적인 사항을 검토하지않고 지방환경청의 자의적인 자료요구 및 검토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검토지침을 만들어 지방환경청에 시달하고, 행자부가 시행령안에 동사항을 삽입키로 조정</li> </ul> </li> </ul> <p>※ 제19회 차관회의(5.16)에서 같은 취지로 수정의결</p>

1. 과 제 명	테러방지법 제정관련 조정
2. 발굴배경	○ 01.9.11일 미국 테러발생 및 생물테러 공포 확산 등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종테러에 대한 대비태세 제도화 필요성
3. 과제내용	○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시스템 구축 ○ 생물, 화학, 방사능 등 신종테러에 대비한 부처 대응능력 향상 및 시스템 구축
4. 협의 필요사항	○ 테러 개념 ○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위원 참여기관 범위 ○ 외국인 출국조치 요건 ○ 군병력 등의 지원요건 ○ 대테러센터 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범위 등
5. 조정경과	○ 국무조정실장주재 관계차관회의(01.11.5) ○ 차관회의(11.26) 및 국무회의(11.27)
6. 조정결과	○ 테러개념에 목적성, 계획성, 영향 등 엄격한 요건을 적용 ○ 국가대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15개 기관의 장이 위원이 되도록 함 ○ 테러사건 발생 또는 예상시 과기부, 복지부, 환경부, 외교부, 경찰청에 분야별 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함 ○ 외국인의 출국조치 요건을 엄격히 규정 ○ 군병력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활동하고, 국회가 철수 요청시 이에 응하도록 함 ○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대테러센터 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함 ○ 기타 불고지죄 등 인권침해소지 규정 정비

1. 과 제 명	군 비행안전구역 건축고도제한 완화
2. 발굴배경	자체발굴('02.01.05)
3. 과제내용	국방부·행자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견조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1.3, 국방부의 군용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내 고지대의 건축 허용높이 상향조정(12→45m) 방침 발표</li> <li>- 행자부·건교부 등에서 사전협의 미비, 난개발 위험성 등을 이유로 이견 표출</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3.26, 국방부차관주재 정책회의에서 군용항공기지법 국방부 개정안 확정</li> <li>○ '02.4.2, 국방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의견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건교부 이견 제시</li> </ul> </li> <li>○ '02.4.23, 국방부 개정안 입법예고중 동일취지의 의원입법 국방위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 정부입법안 진행 중단</li> </ul> </li> </ul>
6. 조정결과	○ 의원입법 진행에 따른 추가 조정사항 파악

1. 과 제 명	군인보험제도 개선
2. 발굴배경	국방부 요청('01. 11. 22)
3. 과제내용	국방부·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의 이견을 수렴, 군인보험제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조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방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보험은 보험금 납부의무자인 현역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li> <li>※ 보험료 일부로 제대군인 대부사업을 하는 점과 현행 군인보험 운영 방식에 대한 현역군인들의 불만 팽배</li> <li>- 운영주체를 현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로 이관해야 함</li> </ul> </li> <li>○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보험은 현역군인복지와 함께 제대군인 생활안정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서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제대군인 대부사업은 당연</li> <li>- 군인보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개선할 수는 있으나 운영주체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것은 반대</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11,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의 의견청취</li> <li>○ '01.12.4,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li> <li>○ '02.1.8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개선방안 마련</li> <li>○ '02.3.7 국방부주관 개선협의회(국방부, 보훈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보험법 폐지, 현역은 자유의사에 따라 민간보험 가입, 제대군인지원은 보훈처 주관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방안 합의</li> </ul> </li> <li>○ '02.4.24 국방부 정책회의(차관주재)시 상기 개선안 의결, '02.5.23 보훈처 처장 보고</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보험법 폐지, 현역은 자유의사에 따라 민간보험 가입, 제대군인지원은 보훈처 주관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li> </ul>

1. 과 제 명	을지훈련기간중 주5일근무 시험실시 관련 부처간 이견 조정
2. 발굴배경	자체발굴('02.05.15)
3. 과제내용	비기위·행자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견조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기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을지훈련기간과 주5일근무 시험실시일이 중첩되므로 당월 주5일근무주의 변경 요망</li> </ul> </li> <li>○ 행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년 주5일근무 시험실시 일정은 이미 대국민 공지사항으로 변경시 민원혼란의 우려가 있으며, 훈련에 지장이 없다면 훈련의 조기종료 고려 필요</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5.15~27, 비기위·행자부 의견청취</li> <li>○ '02.5.28, 총괄조정관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을지훈련의 조기종료는 기술적으로 어려우며 국민정서상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기시달된 주5일근무 시험실시 일정의 변경도 민원 혼란의 여지가 있음</li> <li>- 금년 을지훈련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당월 주5일근무 시험실시는 생략하기로 합의</li> </ul> </li> </ul>
6. 조정결과	○ 금년 을지훈련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당월 주5일근무 시험실시 생략



1. 과 제 명	사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2. 발굴배경	자체발굴('02.02.28)
3. 과제내용	국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견조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사병이 휴가·출장중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과도한 진료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는 등 민원 빈발</li> <li>※ 현역사병은 군 입대시 보험급여 자격 정지(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li> <li>○ '96.1 국방부의 사병 건강보험 자격유지 검토요청 이래 수회에 걸친 기관간 협의·중재노력이 있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미해결</li> <li>※ '96.8 행정쇄신위원회, '선택적 건강보험 가입案'을 제시하였으나, 복지부가 「강제보험원칙」과의 상충을 이유로 반대</li> <li>○ 국방부, 입대후에도 보험료 납부로 입대전과 동일한 보험혜택 주장</li> <li>○ 보건복지부, 국가(국방부)의 부담으로 보완책(선치료 사후정산, 현행 위탁진료제 보완 등) 마련 주장</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3.20, 국방부 및 복지부의 의견 청취</li> <li>○ '02.5.9, 당실 주관 관계부처 실무협의 실시, 기관별 입장 확인 및 이견·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li> <li>○ '02.6.21(금)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사병의 경우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현행 軍 '민간위탁진료제'의 확대·보완 실시를 검토하기로 협의</li> </ul> </li> </ul>
6. 조정결과	○ 국방부·복지부, '위탁진료제' 확대·보완 방안 검토

1. 과 제 명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2. 발굴배경	교육부 · 과기부 요청('02.05.07)
3. 과제내용	국방부 · 병무청 · 교육부 · 과기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이견조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 과기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공계 석·박사의 대체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5년)이 타분야 병역대체복무자(3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 형평성 문제 대두</li> <li>- 이공계의 진학촉진과 이공계열의 전문성 확보차원에서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li> </ul> </li> <li>○ 국방부 ·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운영 및 지원은 병역자원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향후 병역자원의 감소추세에 따라 2003년 이후에는 대체복무제도의 축소·폐지가 불가피하고 2005년 이후에는 군소요 충원도 곤란한 상황이므로 복무기간 단축 및 인원확대는 수용 불가</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5.7, 교육부 · 과기부 의견청취</li> <li>○ '02.5.23, 병무청과 관련 협의</li> <li>○ '02.5.27, 국방부와 관련 협의</li> <li>○ '02.6.26 총괄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회의</li> <li>○ '02.9.3 총괄조정관 주재, 국방부 인사복지국장 협의</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무기간 단축 : 추후 병역법 개정시 병역자원 및 대체복무제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복무기간 단축 검토</li> <li>○ 배정인원 확대 : 향후 자연계 석·박사 고급인력 배출인원과 전문연구요원 수요를 연계하여 적절히 조정 추진</li> <li>○ 벤처 편중인원 조정 : 추천권자와의 협의 강화로 편중배정 배제</li> <li>○ 전직제한기간 완화 : 전직승인사유를 완화 및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2년 내라도 전직 가능 방안 검토</li> </ul>

1. 과 제 명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마련
2. 발굴배경	법무부 등 요청
3. 과제내용	법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대책수립 및 시행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 관련 관계부처간 이견사항 조율 필요</li> <li>○ 법무부, 불법체류자진신고 관련 접수인력 지원 요청</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 1. 15(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개최(총괄조정관 주재)</li> <li>○ '02. 1. 24(목)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개최(국무조정실장 주재)</li> <li>○ '02. 3. 2(토)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개최(국무조정실장 주재)</li> <li>○ '02. 3. 12(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개최(국무총리 주재), 대책안 확정·시행</li> <li>○ '02. 4. 30(화)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개최(총괄조정관 주재)</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문제 전담기구 설치는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li> <li>○ 산업연수생 제도 외에 새로운 외국인력제도의 도입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li> <li>○ 공관의 영사인력증원은 현지 고용 확충, 월드컵 기간중 관계부처 인력과견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영사인력 자체를 증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인력증원에 따른 예산을 지원</li> <li>○ 불법체류자 보호시설은 기존시설을 우선 활용하면서 추가시설을 확충</li> <li>○ 불법체류자진신고 접수관련 부족인력을 노동부, 중기청에서 지원</li> </ul>

1. 과제명	2002 아시아대회 운영비 등 예산지원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합동점검(6.25~6.30)시 예산부족 문제점 도출</li> <li>○ 감사원 감사(5.29~6.30)시 지적</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아시아대회 유치이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외환위기 발생 등으로 수익사업이 부진하여 시설 개·보수 및 대회운영비 등이 부족 예상</li> <li>○ 원활한 대회개최 및 국가적 행사인 점을 감안하여 국고지원 요청</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대회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해준 선례가 없는 점등을 감안 지원곤란</li> </ul> </li> <li>○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교부세의 목적상 운영비 지원곤란</li> </ul> </li> <li>○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용도, 규모 등을 감안 지원곤란</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0, 8.18, 8.25, 9.4 실무대책협의회 개최</li> <li>○ 9.7 관계차관회의 개최·확정</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분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예산처 : 353억원, 행정자치부(특별교부세) : 100억, 문화부(기금) : 196억, 부산시 : 96억</li> </ul> </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없음</li> </ul>

1. 과제명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건설지원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합동점검(6.25~30)시 문제점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 1차순환로-월산마을구간 도로건설비 164억원 국고지원요청</li> <li>- 서귀포시 국도12호선, 국도16호선 미확장구간 국고지원요청</li> </ul> </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난 해소를 위한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건설비 지원</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법상 도시계획구역내의 도로는 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청으로 국고지원대상이 아님</li> </ul> </li> <li>○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여금 지원대상이기는 하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음</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월 7일 관계차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경제부 등 관계기관 차관 및 10개 개최시도 참석</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재정곤란을 감안 대회지원법에 근거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도로(광주도로, 서귀포시 국도 12호선)에 한해 50% 국고지원</li> <li>- 부족분에 대하여는 행자부 양여금 등 지원</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없음</li> </ul>

1. 과제명	월드컵기간중 수도권 자동차 2부제 시행방안
2. 발굴배경	○ 각 부처별 지원대책 추진상황 파악 - 자동차 2부제 실시계획 미확정
3. 과제내용	○ 대회기간중 원활한 교통소동을 위한 수도권 자동차 2부제 연계시행 - 수도권의 교통특성을 고려, 효과 극대화 필요
4. 이견내용	○ 서울시 - 수도권 교통특성상 공동 시행 필요  ○ 건설교통부, 경기도 - 개최도시외 주민의 불편을 고려 최소화  ○ 환경부 - 대기오염의 특성상 대회기간 전체 수도권 2부제 필요
5. 조정경과	○ 2002년 1월11일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 건교부,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등 관계부처 과장참석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수도권의 경우에는 교통특성을 고려, 부제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추진하되 시민불편 최소화  · 경기전일과 당일에 서울, 인천, 경기지역 2부제를 실시하되 · 경기가 열리는 개최도시는 강제 2부제, 여타 시와 경기도지역은 자율 2부제 실시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없음

1. 과제명	2002 월드컵 개최도시 문화행사 지원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8.1 월드컵조직위 현안사항 보고시 건의</li> <li>- 개최도시 문화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약 300억)</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드컵계기 ‘지방의 세계화’, ‘IT강국 이미지’부각 등을 위하여 독창적이고 지방고유의 문화행사 개최 필요</li> <li>○ 문화행사 개최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국내·외 경기침체와 지자체 재정상태 열악 등으로 행사준비에 차질이 우려되어 국고지원 요청</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문화행사는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고지원 요구도 없는 사항으로 국고지원 곤란</li> </ul> </li> <li>○ 월드컵조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행사의 중요성을 감안 국고지원 필요</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8.18, 8.25, 9.4 실무대책협의회 개최</li> <li>○ 9.7 관계차관회의 개최·확정</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9.7 차관회의에서 조정원안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 및 조직위에서 각각 소요예산의 25%를 지원</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없음.</li> </ul>

1. 과제명	월드컵계기 국가홍보 및 붐조성대책 조정 - 인천신공항고속도로 배너기 설치 지원 등
2. 발굴배경	○ 월드컵조직위 요청
3. 과제내용	○ 월드컵 붐 조성과 손님맛이를 위해 설치 추진
4. 이견내용	○ 건교부 - 도로법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광고물은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아님  ○ 월드컵조직위 - 월드컵계기 공공목적의 홍보물로 설치 협조
5. 조정경과	○ 2002년 5월1일 제24차 실무협의회 - 총괄조정관(주재), 행자부·문화부·건교부 등 참석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월드컵 배너기는 붐조성과 외국손님맛이를 위해 설치하는 월드컵 홍보물로 보아야 하며, 조직위가 배너기에 협찬사 로고를 표시하는 것은 예산사정상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  - 배너기는 건교부가 '99.8월 허가대상에서 삭제한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광고물”과는 성격이나 형태가 다른 홍보물이고,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됨  - 현재, 도로법시행령상 도로점용 허가 대상인 “깃대”로 간주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설치한 “로고가 표시되지 않은 배너기”와 같이 깃대로 간주하여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할 것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없음



1. 과제명	월드컵·아시아대회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설치 지원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4일 아시아경기 조직위 협조요청</li> <li>○ 8월12일 월드컵조직위 축구조형물광고 대행업체 길보사광고(주) 민원제기</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조성목적의 광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월드컵 및 아시아대회의 준비·운영 지원</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교통부(한국도로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따라 광고물설치는 금지</li> <li>- 한국도로공사의 예규로 '98.8이후 신규광고물 설치 금지</li> </ul> </li> <li>○ 월드컵조직위, 아시아 조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회지원법은 특별법으로 우선적용</li> </ul> </li> <li>○ 광고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물 설치장소에 대한 협조 필요</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23일 점검단 국장 주재 관계부처 관계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월드컵조직위, 아시아 조직위의 관계관 참석</li> </ul> </li> <li>○ 10월 26일 점검단 국장 현지 실사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공사, 월드컵조직위, 광고대행업체 공동 현지 실사 및 설치장소 선정</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회지원법이 우선적용되므로 휴게소내 광고물설치는 허용하되 고속도로 주행의 안전성 확보</li> <li>- 축구조형물광고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장소 선정 경부고속도로 16개 휴게소 현지실사 후 12개소 합의</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없음</li> </ul>

1. 과제명	아시아대회 광고기간 연장 지원
2. 발굴배경	○ 아시아대회조직위 광고기간연장 지원 요청 - 대회운영자금 부족으로 광고기간을 연장하여 추가 기금마련이 필요
3. 과제내용	○ 대회지원법시행령에서 정한 광고사업기간(02.12.31 →2003.6.30) 연장 - 대회운영 재원 일부 추가 마련
4. 이견내용	○ 건설교통부 - 버스·택시 등 차량이용 옥외광고물에 대해 버스와 택지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이의제기 (차관회의 상정보류 2001.9.29)  ○ 아시아조직위 - 추가 재원마련이 절실
5. 조정경과	○ 2001년 10월20일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 행자부 등 관계부처 실무위원 참석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버스 등 차량이용광고의 사업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 대신 운수사업자가 6개월간 예상되는 조직위 수익 금을 보전(01.12.3 합의서 체결) - 2001. 12. 27 아시아대회지원법 시행령 개정 - 2002. 7. 4. 버스연합회 지불보증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없음

1. 과제명	인천공항 입국자 휴대품 전수검색
2. 발굴배경	○ 전수 X-ray 검색 등 보안검색 강화로 안전월드컵 지원
3. 과제내용	○ 입국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원활한 전수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X-ray 검색대 설치 장소 및 대수 결정
4. 이견내용	○ 관세청 - 인천공항 1층 세관구역은 장소가 협소하여 X-ray 검색대 설치가 불가능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 2층 입국심사대 뒤 통로는 장소가 협소하여 X-ray 검색대 설치장소로 부적합
5. 조정경과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기관회의 개최('02.4.18) - 시범운영 2회 실시(4.22, 4.29)  ○ 제24차 실무대책협의회의('02.5.1)  ○ 최종 조정('02.5.14)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운용기간 : '02.6.30일까지 - 설치대수 : 동·서편 1층 4대, 2층 4대 등 총 8대 추가 설치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아시안게임 기간까지 연장여부는 추후 실무대책협의회의에서 검토

1. 과제명	천연가스버스 보급 촉진 특별대책
2. 발굴배경	○ '01.7.27 사회분야 관계장관회의시 대통령께서 이동충전차량을 도입하여 월드컵 개최도시에 우선적으로 천연가스버스 확대 보급을 지시
3. 과제내용	○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한 경유와 가격차의 안정적 유지 필요(115원) ○ 개별차고지에 충전소 설치가 곤란하므로 이동충전차량의 도입을 추진( 9월중 안전성, 경제성 등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4. 이견내용	○ 산자부 - 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 ○ 기획예산처 - 연료가격차 유지 등을 위한 국고 지원은 곤란
5. 조정경과	○ 8월 6일 기획총괄국장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 ○ 8월30일 총괄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 9월 4일 총괄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실장회의 ○ 9월 7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
6. 조정결과	○ 조정결과(9.7 차관회의에서 조정원안 통과) - 9월중 이동충전차량 시범사업실시(환경부, 산자부협조) - 2002년부터 2년간 경유와 연료가격차 유지를 위한 예산지원(기획예산처 : '02년 67억원) - 이동충전차량 50대 확보예산지원 ('02년 100억원)등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위한 454억원 예산확보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연료비 보조지원 : 2002년 정부예산안에 기반영 - 개별차고지의 충전소 입지완화를 위한 '학교보건법'개정(교육부), 이동식 충전시설 보급방안(환경부·산자부) 추진 지원

1. 과제명	천연가스 이동식충전차량 도입방안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7.27 사회분야 관계장관회의시 대통령께서 이동충전차량을 도입하여 월드컵 개최도시에 우선적으로 천연가스버스 확대 보급을 지시</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가스버스 이동충전차량 도입대수의 확정</li> <li>○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마련</li> <li>○ 본 사업 시행에 대비한 착실한 사업계획 마무리</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가스 이동충전차량 도입대수 최소화</li> </ul> </li> <li>○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차 시험사업주체 확정과 충전행위를 신고제로완화</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31일 기획총괄국장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li> <li>○ 11월 8일 기획총괄국장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li> <li>○ '02년 1월15일 기획총괄국장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li> <li>○ '02년 1월23일 기획총괄국장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11.8 관계부처 과장회의에서 조정원안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충전차량 2차 시범사업에 15대 도입(산자부 수용)</li> <li>-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조속마련(산자부)</li> <li>- 이동충전차량사업자 조속 확정(한국가스공사)</li> <li>- 천연가스버스에 충전행위를 신고제로 완화 검토</li> </ul> </li> <li>○ 조정결과(1.23 관계부처 과장회의에서 조정원안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충전차량은 계획된 100대 이내로 한정(환경부)</li> <li>- 고압가스관련법 개정전까지 시험기간 연장</li> <li>- 이동충전차량 추가발주(한국가스공사)</li> <li>- 이동충전시설관련 관련법령개정 추진(산자부)</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충전차량 도입대수: 100대 이내</li> <li>-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등 개정추진사항</li> <li>- 이동충전차량사업자 선정과정</li> </ul> </li> </ul>

1. 과제명	천연가스 고정충전소 설치관련 관계기관 의견조정
2. 발굴배경	○ 월드컵 개최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천연가스버스를 우선적으로 확대 보급이 필요
3. 과제내용	○ 차량차고지의 충전소 가스배관 우선 설치 ○ 차량차고지내 천연가스 충전소 조속 설치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충전소 관리동 건축관련
4. 이견내용	○ 고양시 - 가스관 매설은 법면매설만을 주장 ○ 환경부 - 법면매설이 불가한 경우는 도로굴착이 불가피
5. 조정경과	○ 2001년2 1일 기획총괄국장 주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관계관 회의
6. 조정결과	○ 조정결과(2.1관계관회의에서 조정원안 통과) - 도로굴착이 불가피한 구간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조정 - 관리동 높이는 기존 건물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 차고지충전소 설치허가는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는경우에 적극협조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없음

□ 經濟調整官室 □

1. 과 제 명	울산·온산 산업단지 주민이주사업으로 인한 채무부담 조정
2. 발굴배경	○ 울산광역시에서 문제제기 및 조정요청(2001.7)
3. 과제내용	○ '01.2월 대통령 현대중공업 방문시 울산·온산 산업단지내 환경오염지구 주민이주지시에 따라 국비지원하에 '85~'97년간 주민이주를 완료하였으나 - 이주사업완료후 토지매각 부진, 지가하락 등으로 650여억 원의 채무가 잔존하여 울산시가 이에 대한 국고지원 요청
4. 이견내용	○ 울산광역시 -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주민이주사업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채무가 잔존하게 되었으므로 국비지원 또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공원 및 녹지지역 등 75만평(환가액 716억원)을 국가에서 인수해 줄 필요 ○ 건설교통부 - 울산광역시가 요청하는 공원 및 녹지지역 국가매입은 법적 근거와 전례가 없고 타 공단내의 과급문제 등 고려시 곤란 ○ 기획예산처 -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자체 채무에 대해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재정지원 사례도 없음
5. 조정경과	○ 채경금융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01.10.5, '02.4.30) 등을 통해 조정방안 마련 ○ '02.5.1 관계부처간 합의 조정결과를 건교부, 기획예산처, 울산광역시에 각각 통보하여 이행조치
6. 조정결과	○ 사업추진이 이미 종료된 사업에 대해 잔여 채무상환을 위한 중앙정부 지원은 곤란 ○ 또한 현재 보유중인 잔여지를 매각할 경우 채무상환이 가능하므로 매각이 부진하다고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울산시의 다양한 채무해소 노력 필요) ○ 다만, 정부지원기준에 합당한 울산시의 사업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 적극 지원 검토



1. 과제명	국제선 구간중 국내구간 운항기의 외항기 자격관련 조정
2. 발굴배경	대구광역시에서 문제제기 및 조정요청(2002.5)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3~'02.5간 대구/부산/일본 국제선 구간을 기종을 변경하여 (소형기→중형기) 경유 운항하여 왔으나</li> <li>○ '02.5월 관세청이 국제선 구간중 기종을 변경하여 국내구간 (예, 대구/부산)만 운항하는 항공기는 외항기가 아니므로 통관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국제선 취항 중단</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부산/일본 국제선 구간중 대구/부산만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세법상 내항기이므로 통관절차가 불필요하며 부산에서 통관절차를 받아야 함</li> </ul> </li> <li>○ 대구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부산/일본 국제선 구간중 통관절차를 대구가 아닌 부산에서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대구/일본 국제선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대구·경북의 불편 가중</li> </ul> </li> <li>○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김해/도쿄 국제선 운항 면허를 준 상태이므로 관세청은 대구공항에서 통관업무를 지원할 필요</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조정관 및 재정금융심의관 주재로 대구시와 실무협의, 4~5회 관세청에게 관세법의 탄력적 집행 협조 요청</li> <li>- '02.5.28 관세청 차장 주재로 건교부, 대구시, 항공사 등 관계기관 회의 개최</li> <li>○ '02.6.19 관세법 소관부처인 재경부에 사안을 이첩하여 관세법의 탄력적 해석 및 전향적 보완 검토 요청</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적으로 법개정없이 도심공항터미널제도(출국시), 보세 운송제도(입국시)를 활용하여 현행과 같이 대구공항에서 통관업무 시행</li> <li>○ 중장기적으로 국제노선중 국내구간만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통관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추진</li> </ul>

1. 과제명	신용금고의 점포신설에 대한 인가요건 완화 관련
2. 발굴배경	금융감독위원회 요청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경부는 서민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신용금고의 점포신설이 용이하도록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개정 추진</li> <li>○ 개정과정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간 이견</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감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력이 충분하지 못한 금고들까지 무분별하게 점포를 증설함으로써 금고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본요건 강화</li> </ul> </li> <li>△ 현 행 :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서울시 60억원, 광역시 40억원, 도 20억원)의 2배이상일 경우 지점신설 허용, 1배 이상일 경우 출장소 신설 허용)</li> <li>△ 금감위 : 법정자본금의 2배이상 → 3배이상</li> <li>- 금고의 점포 신설을 통제하기위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관련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li> <li>○ 재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요건의 현행유지, 위임근거 신설 불필요</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회의를 개최('01.10.22), 재경부안대로 자본요건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금감위에 별도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기로 결정</li> <li>- 규제는 완화하되 금고의 부실화방지는 건전성 감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li> </ul>
6. 조정결과	○ '01.10.30 국무회의에서 조정안(원안)대로 의결

1. 과 제 명	공산품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업무 추진체계 조정
2. 발굴배경	○ 감사원에서 기능중복 문제 제기 및 조정요청(2001.11)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규제 대응업무가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로 이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가 수입규제대응업무를 각각 수행함으로써 업체의 불편과 대외적인 정책혼선이 초래될 우려</li> </ul> </li> <li>○ 수입규제 대응업무시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명확히 조정하는 방안 검토</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통상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분쟁과 수입규제 대응업무는 국제정치 및 외교관계 등의 상호작용하에서 발생하는 종합적인 교섭기능의 성격</li> <li>- 관련법규에 따라서 통상교섭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li> </ul> </li> <li>○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응주체는 기본적으로 피소된 우리 수출기업이며, 이러한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산자부의 기본업무</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경금융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1.17) 등을 통해 조정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양 부서가 중점을 두고 수행하는 업무가 상이하고, 급증하는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의 공동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수입규제대책반」은 각각 존치하되,</li> <li>- 수입규제 업무의 대응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 기관 “수입규제대책반” 회의에 상대 기관 관계관을 상시멤버로 참석토록 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li> </ul> </li> </ul> </li> </ul>
6. 조정결과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마련된 조정안을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각각 통보하고,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당실 조정안의 충실한 시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 정구(02.7)

1. 과제명	복권시장 안정대책 조정
2. 발굴배경	'01년 하반기 주요 언론과 정기국회에서 복권시장 과열에 대해 문제제기
3. 과제내용	○ 10개 복권발행기관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국민들의 사행심 조장 등 복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공익기금 적립율을 제고
4. 이견내용	○ 건설교통부 등 기존복권발행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자율협의체인 「복권발행협의회」에서 정한 자율규제안 준수 요망</li> <li>- 최고당첨금 제한을 받지않는 이벤트성 고액복권을 기관당 1회에 한하여 발행 허용</li> </ul> ○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당 5억원씩 기간에 따라 최고당첨금 별도 설정 요망</li> </ul>
5. 조정경과	○ 경제조정관 주재 조정회의를 개최('01.12), 총리훈령으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규정」을 제정('01.3)하여 복권관련 사항을 조정하는 발행조정위원회 설치 ○ 제1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02.6.20)를 개최하여 「복권 시장안정대책」 마련·시행
6. 조정결과	○ 인쇄식복권의 최고당첨금을 추첨식 5억원, 즉석식 1 억원으로 제한 ○ 이벤트성 고액복권 발매 전면금지 ○ 인터넷복권의 최고당첨금을 1억원으로 제한

1. 과제명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건설 관련 조정
2. 발굴배경	○ 산자부 및 강원도 요구
3. 과제내용	○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대관령 삼양측산 일대)에 약1,557억원을 투자하여 풍력발전단지(99MW) 조성 ○ 유니슨산업(주)와 독일 LI社의 합작회사인 강원풍력 발전 주식회사 설립 ('01.9.15)하고 1단계 공사('02. 상반기~'03.12) 추진계획
4. 이견내용	○ 산림청 - 풍력단지 조성예정지(삼양목장·한일목장 부지)는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 이고 백두대간 지역이므로 풍력발전기 설치 반대(국유림 대부 불허) ○ 산자부 - 조성예정지역은 초지지역으로 장기임대중이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환경파괴가 적으며 풍력 발전은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로서 기후변화협약 대응 차원에서 건설 필요
5. 조정경과	○ 산업심의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01.9.21, '02.4.19)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02.4.29)
6. 조정결과	○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 밖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전제 등 일정조건하에 우선 설치(42기)하고 「제한지역」 내는 산지관리법 시행(2003.1.1)후 추진(24기)키로 함.

1. 과제명	교토의정서 국회비준동의 관련 조정
2. 발굴배경	○ 외교부의 조정요청
3. 과제내용	○ 교토의정서 비준 추진시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법제처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외교부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조정 요청
4. 이견내용	○ 법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 (부속서I 국가)가 아니므로 헌법 60조 1항의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이 아님.</li> </ul> ○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의무부담국가는 아니나 교토의정서는 경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li> </ul>
5. 조정경과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02.5.30)
6. 조정결과	○ 교토의정서 발효시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합목적적으로 헌법을 해석하여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기로 함.

1. 과제명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관련조정
2. 발굴배경	○ 자체 발굴 - 온라인게임 주도권 갈등심화로 정책불신우려
3. 과제내용	○ 온라인게임으로 인해 게임중독, 아이템 실제거래 및 폭력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등급분류 시행을 문광부가 추진
4. 이견내용	○ 문화부 - 6월 1일부터 사전등급분류를 시행기로 발표 ○ 정통부 - 실효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후심의와의 중복을 이유로 반대
5. 조정경과	○ 2차례에 걸친 실무조정회의를 거친 후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1급이 참석한 조정회의 개최(5.28) ○ 정통부는 영등위 기준에 따른 민간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5.30) ○ 문화부는 6.1시행을 유보하고, 공청회 개최(6.14) 및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준비(7.1시행, 3개월 유예)
6. 조정결과	○ 영등위가 마련한 온라인 게임물 사전등급분류세부 기준(업무 처리지침)(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 온라인게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전등급분류를 시행하고 수정분에 대한 심사는 최소화함으로써 온라인게임의 창의성이 보장되도록 함 ○ 중장기적으로 업계의 자율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1. 과제명	생명윤리 관련 법률제정 업무 조정
2. 발굴배경	○ 인간복제등 생명윤리문제 해결을 위해 과기부와 복지부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각각 마련함에 따라 부처간 업무중복 및 정책혼선 우려
3. 과제내용	○ 과기부: 「인간복제금지및줄기세포연구등에관한법률」 - 생명공학육성 관련 연구허용범위설정 위주 ○ 복지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 생명윤리확보 관련 제도적 관리체계 위주
4. 이견내용	○ 과기부 - 체세포복제등 최근에 제기된 문제만으로 한정하여 국내 생명공학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복지부 - 냉동잉여배아 이용·관리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단일법에 포괄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
5. 조정경과	○ 2002.7.23 산업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 - 이견내용 확인 및 조정방안 협의 ○ 2002.7.25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 조정방안 심의 및 확정
6. 조정결과	○ 생명윤리문제와 국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단일 법령 제정 추진 ○ 복지부 법률안을 토대로 하되,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가 과기부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법안에 반영



1. 과제명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 관련 조정
2. 발굴배경	○ 외국인산업연수생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노동부와 중기청간의 부처간 주도권 갈등심화 및 정책혼선 우려
3. 과제내용	○ '01.12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과 '02.7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산업연수생 정원조정 관리, 불법체류 및 이탈방지대책등 개선대책(Ⅱ)마련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취업자관리에 필요한 규정은 노동부가 제정</li> <li>- 모범연수생 우대조치는 산업연수생제도 기간연장 효과로 노동단체등 비판론자들의 문제제기 우려, 총정원 10%수준은 큰규모이므로 재검토요망</li> </ul> </li> <li>○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정원관리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리기관 일원화가 전제되어야하며 관계규정은 중기청에서 마련</li> <li>- 모범연수생 우대조치는 기간연장이 아니라 E-7 (특정활동)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므로 산업연수생제도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함</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02.8.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견내용 확인 및 조정방안 협의</li> </ul> </li> <li>○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개최('02.8.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방안 심의 및 확정</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취업자 고용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부 고시로 정하며,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의 총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시로 정함</li> <li>○ 모범연수생 인센티브부여문제는 불법체류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차원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모범연수생 규모를 총정원의 10% 이내로 하여 세부계획은 법무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수립</li> </ul>

1. 과제명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관련 조정
2. 발굴배경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이 부처이견으로 지연
3. 과제내용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시 용적율 조정에 관한 이견조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법 제정취지에 따라 용적율을 500~700% 범위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규정. 단, 서울시의 경우는 500% 이내에서 규정</li> </ul> </li> <li>○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개발, 기타 시설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용적율 대폭 상향조정 반대</li> <li>- 서울시의 경우는 400% 범위내에서 규정필요 주장</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4.13. 산업정책과장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견내용 확인 및 조정방안 협의</li> </ul> </li> <li>○ '02.5.9.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례 차관회의에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방안 심의 및 확정</li> </ul> </li> </ul>
6. 조정결과	○ 서울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00% 범위내에서, 준주거지역에서는 450% 범위내에서 적용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함

1. 과제명	경유 시내버스 공급중단관련
2. 발굴배경	○ 경유 시내버스 배출가스규제기준강화로 국내자동차제작사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사용 시내버스 생산이 중단되고, 시내버스 대체차 및 신규사업용 차량확보가 어려워 버스운행중단 등 민원제기
3. 과제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製作車 배출가스규제기준 강화('02.1.1부터 시행)에 따른 대책 - 배출가스 기준규정 시행시기 유예, 엔진수입제작 및 개발 촉진, 시내버스 차령연장 등
4. 이견내용	○ 환경부 :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고('93.기준개정) 국제기준충족을 위해 시행연기는 곤란, 천연가스버스로 대체 ○ 산자부 : 그동안 천연가스버스 개발에 주력해 왔으며 가스차량 확대보급으로 해결, 엔진 수입 장착은 곤란 ※ 엔진수입장착 제작에 6월~1년정도 소요 및 국내 기술개발 가능 ○ 건교부 : 중소도시는 충전시설이 없어 가스차량 대체가 곤란하고, 엔진개발 기간을 감안(1년6개월 이상)하여 시행시기 유예
5. 조정경과	○ 2002.2.8 : 농수산건설심의관주재 관계부처 회의 - 건설교통부, 산자부, 환경부 담당과장 ○ 2002.2.23 : 관계부처 및 버스제작사 회의
6. 조정결과	○ 회의결과 - 저공해경유버스 생산가능 시기 확인 ※현대('02.9월), 대우('02.7월이후) - 배출가스인증, 형식승인절차를 신속진행하여 경유버스조기공급 및 시내버스업계 민원해소

1. 과제명	생물·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
2. 발굴배경	○ '92. 6 “생물다양성협약”체결 이후, 생물유전자원이 국가 중요자원으로 국가간 소유권분쟁까지 촉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의 보호와 이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3. 과제내용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생물 유전자원업무의 조정과 유출 방지 등 관리체계 확립 ○ 생물 유전자원의 수집,보호,이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D/B 구축
4. 이견내용	○ 종자(농림부), 동식물(환경부), 천연기념물(문화부), 유전자(과기부)등 자원별 소관부처가 지정되어 있으나 통합적인 보존·이용체계가 미흡 ○ 생물자원보호 법률조항이 미흡 -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률에 무단사용에 대한 금지조항이 없고 해외유출에대한 처벌도 경미
5. 조정경과	○ '01.8.27, 10.20 : 농수산건설심의관주재 관계부처 회의 - 분야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생물자원정보의 공유와 이용을 위한 통합 D/B망 구축 추진 ○ '02. 9. 10 : 관계부처 및 전문가회의 예정 - 생물·유전자원의 정보네트워크 구축 관련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확보 및 활용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사업 추진(과기부) - 연구결과에 따라 국내 관련 기관이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통합체제 구축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유전자원의 보존·확보·활용을 위한 관련규정 정비 추진

1. 과제명	채광·채석 복구비 확보
2. 발굴배경	○ 2000년부터 국토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대하여 언론에서 집중보도함에 따라 국민관심사항으로 대두
3. 과제내용	○ 정부합동조사를 통하여 채광, 채석 복구대상지 (155개소)를 확정 - 중간복구:11, 대집행복구:53, 보완복구:91
4. 이견내용	○ 산림청 : 보완복구 소요 사업비중 50%를 국고로 지원 하였으나,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복구사업 착수가 지연 ○ 시·군 : 예산지원(행자부교부금)및사업기간 연장이 필요
5. 조정경과	○ 2001.11.9 : 경제조정관주재 관계부처 회의 - 행자부, 산림청, 각시·군 부시장 및 부군수 ○ 2002.3.14 :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추진상황 점검 ○ 2002.5.20(5일간) : 복구추진상황 정부합동 현지 점검 실시
6. 조정결과	○ 회의결과 - 국고지원 75%(국고50%, 행자부교부금25%), 시·도 및 시·군에서 지방비25% 부담 - 2002년까지 복구 완료토록 함 ○ 복구대상155개소 중 142개소(92%)는 정상추진중 - 완공 :56, 공사 및 발주:40, 설계 중: 46

1. 과제명	자연공원구역내 건축물의 건폐율 적용문제 조정
2. 발굴배경	○ 01.8.24 차관회의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보류되어 건교부와 환경부의 의견조정 필요
3. 과제내용	○ 자연공원구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에 대해 - 건축법시행령(기존 20%이하, 개정안 40%이하)의 규정과 자연공원법시행규칙(60%이하)의 규정이 상이한데 따른 법적용 문제
4. 이견내용	○ <b>건교부</b> : 공원구역내에서도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공원구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건축법령에도 적합해야 함 ○ <b>환경부</b> : 공원구역내에서는 자연공원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원구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건축법령 적용이 배제됨
5. 조정경과	○ 01.9.4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
6. 조정결과	○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당초안대로 차관회의 상정 ○ 자연공원구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건축법령이 적용되는지 자연공원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b>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기</b> 로 함 ※ 법제처는 이에 따라 자연공원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하여 관계부처에 통보(01.11.17) ○ 자연공원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구역내 건폐율 규정은 자연공원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함

1. 과제명	위성측위시스템(GPS) 운영협의체 관련 총리훈령 제정
2. 발굴배경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위성측위시스템(GPS) 수신자료 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토록 건교부에 통보(01.4)
3. 과제내용	○ 위성측위시스템(GPS) 수신자료 공유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제정 - 규정의 형식, 내용 등에 대해 행자부·건교부간 이견
4. 이견내용	○ 규정의 형식 - 행자부는 총리훈령을 주장 - 건교부는 기관간 협정서(합의서)를 주장  ○ 규정의 내용 - 행자부는 좌표체계에 관한 사항 포함 주장 - 건교부는 위성측위시스템(GPS) 수신자료 공유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주장  ○ 기타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
5. 조정경과	○ 01.5.18 및 01.12.28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 부처회의 개최
6. 조정결과	○ 총리훈령(위성측위시스템기준망구축협의회의 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정(02.1)  - GPS 기준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 소속하에 관련 부처 협의회를 설치  - 협의회는 GPS 기준망 관련제도와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1. 과제명	여수산업단지 주변마을 이주대책 재원분담방안 조정
2. 발굴배경	○ 01.5월 이후 여수시에서 국무조정실, 건교부 등에 국고지원 확대를 건의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6년 산업단지구역내 일부마을을 산업단지에서 제척하였으나, 환경오염으로 이주민원이 제기되어 99.6 주변마을 이주대책 추진방안을 결정(국무조정실 주관 관계차관회의)</li> <li>○ 01.5 실시설계 결과, 여수시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재원분담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 추진</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지원의 범위 및 방법</li> <li>○ 간접보상비의 입주업체 부담방법</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10.25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li> <li>○ 01.11.17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보상비에 대하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제척구역에 연접한 殘存地에 대하여도 국고지원(예산처)</li> <li>- 기타 마을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부담(여수시)</li> </ul> </li> <li>○ 간접보상비는 기존 입주업체의 자발적 참여로 부담</li> <li>○ 산업단지 조성비는 국고보조(예산처)</li> <li>○ 이주택지 조성비에 대하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제척구역 부분의 이주택지 조성비는 移轉跡地 매각대금 중 일부를 활용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li> <li>- 여수시 부담분에 대하여 교부세를 지원(행자부)</li> <li>- 세대당 500만원의 이주비는 이주택지 지원과 중복되므로 지원 불가</li> </ul> </li> </ul>



1. 과제명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관한 이견 조정
2. 발굴배경	○ 01.10.12 건교부·농림부의 조정요구 ※ 01.5.12 1차조정 후속조치
3. 과제내용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지정시 농지면적확보기준 및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대해 농림부 의견 수용 문제
4. 이견내용	○ 농림부 : 건교부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시 농지면적의 확보 등 농림부 의견을 수용한다는 보장을 요구  ○ 건교부 : 타부서의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시 협의 요망
5. 조정경과	○ 01.10.16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
6. 조정결과	○ 양부처가 각각 마련한 관계국장의 합의서 문안을 조정하여 확정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동 내용을 양기관에 통보하여 향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함  ※ 합의내용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농지의 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건교부는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을 세분 하는 기준에 대하여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제정할 때 농림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여 최대한 수용

1. 과제명	토지정보시스템 통합
2. 발굴배경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하도록 건교부·행자부에 통보(01.4)
3. 과제내용	○ 토지관리정보체계(LMIS:건교부)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행자부)의 통합
4. 이견내용	○ <b>건교부</b> : 토지관리정보체계(LMIS)를 중심으로 시스템 통합 ○ <b>행자부</b> :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을 중심으로 시스템 통합
5. 조정경과	○ 01.5.18 및 01.12.14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 수시로 건설교통정책과장 주재 실무검토회의 개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문가의 자문 활용
6. 조정결과	○ 통합 기본방향 및 시스템 기본구조 - 양 시스템의 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통합)하기로 함 - 통합시스템은 3계층 구조로 구축하기로 함 - 통합시스템은 행자부 지적관리업무와 건교부 토지행정업무의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함  ○ 통합시스템 적용 및 운영관리 - 통합시스템 개발후 안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업무의 추진은 기존시스템에 의하기로 함 - 개발된 통합시스템의 관리는 행자부와 건교부의 공동책임으로 하기로 함  ○ 통합추진절차 - 통합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자부와 건교부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행자부와 건교부는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가칭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개발 추진중

1. 과제명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표준화분과위원회 구성방안 조정
2. 발굴배경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에 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NGIS 표준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표준화 추진체계를 정비하도록 정통부에 통보 (01.4)
3. 과제내용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표준화분과위원회 구성
4. 이견내용	○ 산자부 : 국가표준 제정은 산자부 소관업무임을 주장 ○ 정통부 : 자료공유에 필요한 정보통신 표준의 문제 이므로 정통부가 담당할 것을 주장
5. 조정경과	○ 01.5.18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 ○ 01.11.28 조정내용 변경 통보 ※ 01.11.01 관계부처에서 조정내용 변경 요청
6. 조정결과	○ 정통부가 NGIS 표준화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 - 정통부는 표준화분과위원회의 주관기관으로 GIS 표준화업무의 기획·관리·조정 등 총괄업무 수행 -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단체표준 중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은 국가표준으로 고시 - 산업자원부는 ISO/TC211 관련 GIS 표준의 KS 국가표준 제정 - 국립지리원 등 자료생산 및 구축기관은 각 기관의 사업과 관련한 표준의 연구·개발 및 표준화분과 위원회에 표준안 제안

1. 과제명	캠핑용차량 관련 제도개선
2. 발굴배경	○ 제64회 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02.5.16~5.27, 강원도 동해시) 개최를 앞두고 조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
3. 과제내용	○ 캠핑용차량을 자동차 대여사업 가능차종으로 분류하는 문제(건교부) ○ 보통운전면허로 견인 허용 여부(경찰청)
4. 이견내용	○ <b>건교부</b> : 캠핑용차량을 자동차 대여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자동차 분류체계 조정 또는 법률간 관할대상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종합적 검토 필요 ○ <b>경찰청</b> : 보통운전면허로 견인 허용 여부는 운행상의 안전성 문제와 운전면허제도 등의 면밀한 검토 필요
5. 조정경과	○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02.5.14 총리께 보고
6. 조정결과	○ 캠핑용자동차와 캠핑용트레일러를 <b>승합자동차(대여사업 가능)</b> 로 분류하도록 법령에 명문화(건교부) ※ 02.5.24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규정중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없이도 견인할 수 있는 <b>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 제한규정(750kg이하)</b> 은 유지하고, 길이·폭 제한규정(길이 3.5m, 폭 2m이하)은 삭제(경찰청) - 길이·폭은 자동차안전에관한규칙에 의해 일정 규모로 제한 가능 ※ 02.7.3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1. 과제명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조정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00.12)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효율적으로 수도권 을 관리하기 위해 건교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li> <li>○ 건교부에서 개정안을 02.6.20 차관회의에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산자부·서울시의 이견제시로 상정 보류</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중 일부 사항에 대해 이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보전권역안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한해 택지개발사업규모를 확대</li> <li>-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에서 수도권 지자체장을 제외</li> </ul> </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개발사업규모 확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 : 한강 수질관리를 위해 반대</li> <li>- 산자부 : 택지개발사업 외에 도시형공장에 대한 개발사업 허용규모도 확대 요구</li> <li>- 건교부·환경부 : 오염총량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규모를 확대해도 오염관리 가능</li> </ul> </li> <li>○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 지자체장 제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서울시 : 수도권시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수도권 지자체장 제외에 반대</li> <li>- 건교부 : 합리적 의사결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 지자체장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지자체장을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6.26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지개발사업규모 확대 문제는 개정안대로 추진</li> <li>○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수도권 지자체장 제외 문제는 개정안을 철회(수도권 지자체장 계속 참여)</li> </ul>

1. 과제명	활어 원산지 표시제 도입 · 시행 관련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관련,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시행지연이 예상됨에 따라</li> <li>- 해수부가 관계기관간 이견에 대한 조정요청('02.6.19)</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어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 건전화를 도모</li> <li>○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산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 및 해수부 고시</li> <li>- 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제23조 및 산자부 고시</li> </ul> </li> <li>○ 제재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 미표시행위 등 : 최고 1천만원 과태료 부과</li> <li>- 원산지 허위표시 등 :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이하 벌금 등 고발</li> </ul> </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고시('02.1.10개정)에 따라 국내산 활어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 · 시행('02.7.1)</li> <li>-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내산 도입시기에 맞춰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의무화가 필요</li> </ul> </li> <li>○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산 활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시 활어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의 무역마찰 예상</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검열심의회 주재 관계기관 의견조정('02.6.20~)</li> <li>- 해수부 유통가공과장의 제도 추진상황 설명</li> <li>- 외교부, 산자부의 관계관 의견청취</li> <li>○ 조정결과 해양수산부 통보('02.6.26)</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산 활어 원산지표시만으로도 부정유통 방지효과가 충분하므로 활어유통업계 및 영세횟집의 애로 해소를 위해 우선 국내산 활어 원산지표시제부터 시행</li> <li>○ 수입산에 대하여는 국내산에 대한 시행실태 분석 · 검토와 외교부, 산자부 등 관계기관간 재협의를 통해 단계적 실시방안 강구</li> </ul>

1. 과제명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추진 관련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6.13, 기관간 이견사항 인지·확인</li> <li>- 건교부의 도시계획 입안·결정을 위한 고양시의 의견 미제출로 사업추진 지연</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지역개발 촉진 및 남북통일 대비 등을 위해 경의선 용산~문산간 48.6km 단선구간을 복선전철화 추진</li> <li>- 사업기간·투자계획 : '96~2006년, 총 6,712억원</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고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진·소음발생 및 도시개발 장애 등을 이유로 고양시(일산신도시) 도심구간에 대해 지하화 요구</li> </ul> </li> <li>○ 철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화물수송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철도이고, 지하화할 경우 막대한 추가사업비 소요, 공기지연 및 철도기능상 문제로 지하화는 불가</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6.5, 경의선 지하화 요구관련 철도청 설명(감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청의 고양시 설득필요 제시</li> </ul> </li> <li>○ '01.6.18, 철도청의 적극적 대응 및 설득 촉구(국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협의조정위 상정전 철도청 책임하에 고양시 재설득 촉구</li> </ul> </li> <li>○ '01.7.5, 철도청과 고양시간에 지상화 합의</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청장과 고양시장간에 지상화 전제조건부 합의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지하화 효과를 갖는 OPEN터널식 방음벽 시공 등 쾌적성 확보 및 도시기능 저해방지를 위한 보완조치 강구</li> </ul> </li> </ul>

1. 과제명	경부고속철도 운영준비조직 설치·운영 관련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4~10월중 건설교통부가 고속철도 운영준비를 위한 통합조직 구성방안을 마련하여 철도청·공단·건교부간에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기관간 이견으로 합의지연</li> <li>○ 고속철도 운영준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통합운영준비조직 조기설치를 위한 업무조정 필요성 인식('01.11월)</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철도 차량 및 시설물에 대한 시운전과 유지보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2004.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준비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철도의 건설주체인 경부고속철도공단과 운영주체인 철도청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체제 확립을 위한 통합운영준비조직 설치·운영</li> </ul> </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본부의 '철도지원단' 위상을 고려하여 공단본부장 소속보다는 이사장 직할조직으로 하여 별도근무함이 타당</li> <li>- 현업의 '시운전지원단' 인력이 대규모인 점을 감안,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도청 별도조직으로 설치</li> </ul> </li> <li>○ 공단·건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두고, 업무의 원활한 협조·자료공유를 위해 혼합근무함이 필요</li> <li>- 동일현장에서의 지휘체계 이원화는 양 기관 직원간 갈등유발 및 업무단절 개연성이 크므로 별도조직은 곤란</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11.12~13, 건교부 및 철도청의 관계관을 소집하여 고속철도 운영준비의 시급성 환기 및 차질없는 준비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교부 고속철도운영기획과장, 철도청의 기획본부장·고속철도계획과장·고속철도운영과장을 참석시켜 통합운영준비조직의 조기설치방안 협의·조정</li> </ul> </li> <li>○ '01.12.28, 철도청·고속철도공단·건교부간 협약체결 완료</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12.24, 철도청장 서명, '01.12.28, 공단이사장·건교부장관 서명으로 협약체결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속철도 운영준비를 위한 '통합운영준비조직' 구성·운영으로 차질없는 운영준비 추진</li> </ul> </li> </ul>



1. 과제명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제의 등록자격 관련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01.9.1시행)의 차관회의(8.24)상정과 관련 지리적표시의 주체에 대해 관계기관간 이견 발생</li> <li>○ 관계기관의 합의지연 및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 이견에 대한 조정 필요성 제기('01.8월)</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산물의 특정품질 및 명성 등이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상품의 경쟁력 제고 및 상품권자 보호(지리적표시제도 도입)</li> <li>○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산물과 수산물의 특성에 따라 법규정을 분리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1.29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시행일 : '01.9.1)</li> <li>- 지리적표시제의 등록자격 규정을 위한 시행령 제정 추진</li> </ul> </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 상표권 및 특허권과는 달리 “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배타적 권리부여가 가능</li> </ul> </li> <li>○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표시권은 한·EU 통상협정의 결과 도입된 제도로써 국제적 기준에 따라 개별생산자 개인이 아닌 해당 지역내의 상품생산자 “단체”에게만 주어져야 함</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개최('01.8.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조실 : 해수부, 농림부 담당과장</li> <li>- 해수부 : 유통가공과장 등 2명</li> <li>- 농림부 : 식품산업과장 등 2명</li> <li>- 법제처 : 해수부 담당 법제관 등 참석</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표시 등록자격을 “단체”로 한정하여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표시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정부의 통일된 기준을 정립·적용할 필요</li> <li>-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상 지리적표시의 등록자격을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과 같이 통일</li> </ul> </li> <li>○ 법제처가 조정안에 따라 수정, 관계기관 통보토록 조치</li> </ul>

1. 과제명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행관련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10년간('01-2011) 적용할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고시('01.7.6)</li> <li>○ 환경성 평가 주관기관인 환경부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일부언론에 보도('01.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등 문제가 많음.</li> </ul> </li> <li>※ 환경부의 공식적 문제제기는 없었음</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기간 : '01.7월~2011년(1단계:'01-'05, 2단계:'06-'11)</li> <li>- 대상면적 : 186개지구 38.23km<sup>2</sup>(11.5백만평)</li> </ul> </li> <li>※ 1차 계획은 국토확장적 개발위주이었으나, 2차 계획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환경친화적 계획으로 기본틀을 전환</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부의 공유수면매립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서면협의시 환경부가 제출한 의견이 미반영되었고,</li> <li>- 공유수면매립 입지선정 및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평가대상 사업에 포함되어야 함</li> </ul> </li> <li>※ 연안관리심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80개 지구에 대해서는 면허승인시 정밀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철저한 협의필요</li> <li>○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수면매립제도는 무분별한 공유수면매립을 억제하는 규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동 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있음</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서면협의를 거쳐 조정사항 공문시행('01.8.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7.11 언론보도와 관련 환경부의 의견을 제출받고, 이에 대한 해수부의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조치</li> <li>- 해수부의 검토의견과 환경부의 의견을 실무검토하여 조정의견을 문서통보</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수부는 매립면허시 환경부에 충분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하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계획에 포함된 지구의 매립면허 관련 관계기관 협의시 환경성 평가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긴밀협조</li> </ul> </li> <li>○ 공유수면매립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하도록 조치</li> </ul>

1. 과제명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추진 관련
2. 발굴배경	○ 범정부 차원의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유치 추진관련 각종 이견을 심의·조정
3. 과제내용	○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간 각종 이견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유치활동 추진 <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개요 > ○ 주 제 :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바다와 땅의 만남 (Encounter of Sea and Land for a New Community) ○ 기간/장소 : 2010. 5~10월(6개월)/ 전남 여수지역
4. 이견내용	○ 각종 유치활동 추진방향·전략 관련 이견(유치위등관계기관) ○ BIE총회 및 실사준비 및 추진 관련 이견(해수부등관계기관) ○ 회원국 요구사항 지원추진 관련 이견(산자부등관계기관) ○ EDCF 및 KOICA자금 등 조성·활용 관련 이견(재정부등관계기관) ○ 민·관유치사절단 구성·과건 관련 이견(외교부등관계기관)
5. 조정경과	○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개최(5회) - 국무총리 주재로 17개 관계부처 장관 참석 -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추진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 '01.2~'02.6월까지 분기별 1회기준 총5회 개최 ○ 유치활동 점검단회의 개최(13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0개 관계부처 차관급 참석 -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 - '01.11~'02. 8월까지 월 1회기준 총13회 개최 ○ 경제조정관 및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실무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여 각종 이견사항 조정
6. 조정결과	○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및 「유치활동 점검단회의」를 통해 관계기관간 이견조정 및 업무분장으로 유치활동 정상추진중 - 정상회담, 각종 각료급 회의, 각종 국제회의와 민·관 유치사절단 파견 및 해외공관을 통한 유치활동 추진중 - 각종행사 및 언론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활동 등

□ 社會文化調整官室 □

1. 과제명	외국인력 제도개선
2. 발굴배경	○ 자체발굴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력 취업허용 분야, 허용대상, 외국인력 도입 규모, 불법체류자 단속대책, 외국인 인권보호 대책 등 외국인력 관련 종합대책 마련</li> <li>○ 국무조정실 내부회의,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외국인력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7.18)후 세부시행계획 마련중</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연수제는 유지하고,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취업은 방문동거 비자를 활용하되, 허용여부 및 절차는 법무부가 결정해야 함</li> </ul> </li> <li>○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서비스업 불문하고 고용관리제(외국인에 취업비자 발급)를 도입해야 하고, 취업허용시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인력부족확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li> <li>- 부득이한 경우 고용관리제와 산업연수제 병행</li> </ul> </li> <li>○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연수제를 유지하고, 정원을 확대해야 함</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3~6 복지노동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li> <li>○ '02.6.27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li> <li>○ '02.7. 8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li> <li>○ '02.7.18 외국인력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li> </ul>

<p>6. 조정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의 불법체류 만연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현행 제도 변경은 최소화하되,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감안,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 마련</li> <li>- 제조업, 연근해어업 등 분야에는 현행 산업연수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운영하고, 정원은 현행 불법취업인력을 감안, 다소 증원</li> <li>-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는 취업관리제를 새로이 도입하되, 고용주·외국인 모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절차 경유를 의무화</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세부시행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관리제 허용업종 및 절차 등 세부시행방안 마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 및 시행지침 제정)</li> <li>· 불법체류자 단속·출국 계획 수립</li> <li>· 산업연수제 세부 개선방안 마련</li> </ul> </li> </ul> </li> </ul>
----------------	---

1. 과제명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
2. 발굴배경	‘01년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장애인 고용촉진대책 지시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재활 대책(안)”을 수립하였으나, 다음 사항에 대해 부처간 이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수준(2%) 조기 달성 방안</li> <li>-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확대(300인→100인이상 사업장) 및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방안</li> <li>- 장애인 고용관련 정보연계시스템 구축방안</li> </ul> </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수준 조기달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5-6년내에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행자부)</li> </ul> </li> <li>○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촉진대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기업의 부담증가를 이유로 의무고용사업장 확대 및 고용부담금 상향조정 곤란(산자부, 중기청)</li> </ul> </li> <li>○ 장애인 고용관련 정보연계시스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유출등의 우려로 정보연계시스템 구축곤란(복지부)</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7.6 복지노동심의회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 개최</li> <li>○ ‘01.8.31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li> <li>○ ‘02.4.19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개최</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부문은 2004년까지 의무고용비율 달성</li> <li>○ 민간기업의 경우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기간(‘03~‘07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을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li> <li>○ 민간기업의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에서 결정토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12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33% 인상(392천원)</li> </ul> </li> <li>○ 부처별 장애인 고용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복지부 주관으로 정보공유체계 마련</li> </ul>

1. 과제명	마약류정보공유시스템 구축
2. 발굴배경	○ ‘마약류의 관리 및 단속실태’ 평가결과(심사평가조정관실 특정과제 심사평가)
3. 과제내용	○ 국정원,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등 마약수사 관련 각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수사, 국제동향, 정책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 마약류사범 수사·단속능력 제고
4. 이견내용	○ 대검찰청 - 수사정보 등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수사유관기관 간의 폐쇄망으로 마약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 국가정보원 - 국가공안전산망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축
5. 조정경과	○ ‘02.8.13 복지노동심의회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 -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마약수사 및 정보화 담당관 ※ ‘02. 6.4, 6.11, 6.24 등 4차례 조정회의 개최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마약류 정보공유시스템은 수사정보와 해외마약범죄 동향 등 일반정책정보로 구분하여 전자는 검찰청이 후자는 국가정보원이 구축 - 수사정보시스템은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 관련 기관이 활용, 정책정보시스템은 상기관 외에 마약류 정책수립기관에서도 활용 - 구축된 정보서버는 양기관이 주관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마약수사정보망, 국가공안전산망)에 접속 운영하되, 양 네트워크 사이의 망간 접속을 통해 유관기관에서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 과제명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수립
2. 발굴배경	○ 우리사회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성 제기
3. 과제내용	○ 5대 분야별 노인보건복지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소득보장 및 고용촉진</li> <li>- 노인건강보장</li> <li>- 교육 및 문화기회 확대</li> <li>- 실버산업 활성화</li> <li>- 노인대책 추진체계 구축</li> </ul>
4. 이견내용	○ 경로연금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부 : 경로연금 계속 존치 및 수급대상 확대</li> <li>- 기획예산처 : 경로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 제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폐지 필요(수급연령 매년 1세씩 상향조정)</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 '01. 10월 6일(제1차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등 대책위원회 회의 2회, '01. 9월 1일(제1차 실무기획단 회의) 등 회의 9회 개최 ○ '02. 7월 1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 개최
6. 조정결과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확정(5대분야 57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연금제도는 현행 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역할 재정립과 사회복지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li> </ul>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의 실행계획을 마련, 차관회의·국무회의에 보고 추진 (노인복지법 개정 및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추진, 단기·중장기 과제 등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등)

1. 과제명	장애인복지발전계획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수립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98~'02)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li> <li>- 내년도에 시행될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의 기본방향을 확정</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추진상황</li> <li>○ 장애인복지관련 현안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이동권 증진대책</li> <li>- 장애인의무고용 사업장 확대 방안</li> <li>- 장애인 정보화 증진 대책</li> </ul> </li> <li>○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방향</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무고용 및 직업재활에서 장애인 범위 조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부 : 중증장애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범위에서 경증 장애인 제외</li> <li>- 산자부 : 기업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 필요</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 4월 복지노동심의관 주재 실무회의 수차 개최</li> <li>○ '02. 4월29일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개최</li> <li>○ '02.8.21 복지노동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실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계획 수립방법 논의</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개년 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 내실화 및 사회참여 확대</li> <li>-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및 직업교육 강화</li> <li>-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여건 개선</li> </ul> </li> <li>○ 장애인 범위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되 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li> <li>○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추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수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 운영 등</li> </ul> </li> </ul>

1. 과 제 명	식품의 항생제 내성균 저감화 대책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보호원은 2001.6월~2002.5월(1년간) 국민들의 섭취빈도가 높은 식품(쇠고기, 두부, 상추 등18개품목 212시료)에 대해 모니터를 실시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중 62.7%에서 대장균이, 23.6%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으며</li> <li>- 검출된 대장균군(154개)의 92.9%, 황색포도상구균(77개)의 94.8%가 항생제에 죽지 않는 내성균으로 확인됨에 따라</li> </ul> </li> <li>○ 2002.7.10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li> </ul>
3. 과제내용	○ 항생제 사용감소를 위한 부처별 업무 조정
4. 이견내용	범정부적 유기적 업무추진체계 미흡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복지노동심의관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02. 7. 18(목) 15:00</li> <li>- 참석 : 농림부 · 복지부 · 해수부 · 식약청 담당과장, 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li> </ul> </li> <li>○ 관계부처에 회의결과 통보(7.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추진해야 할 사항 통보</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의사, 약사,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로 Working group 구성</li> <li>- 축·수산물중 내성 유발 항생제의 잔류실태조사 및 항생제 내성세균 모니터링 실시 등</li> </ul> </li> <li>○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약품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농축산물 항생제 저감화 대책 마련</li> </ul> </li> <li>○ 해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류 질병예방백신 개발 등 항생제 남용 억제방안 마련</li> </ul> </li> </ul>

1. 과 제 명	비브리오패혈증 등 발생대비 언론보도 및 홍보대책
2. 발굴배경	○ 비브리오패혈증, 콜레라 등의 추측성 보도로 수산물 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어민, 횃집 등 관련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범정부적 대책마련을 요청
3. 과제내용	○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보도 관련 관계기관 협조방안
4. 이견내용	해양수산부, 국립보건원, 시·도 등 관련기관의 협조체계 미흡
5. 조정경과	○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복지노동심의관 주재) - 일시 및 장소 : '02. 4. 17(수) 15:00, 소회의실(1008호) - 참석 : 행자부, 복지부, 해수부, 국정홍보처, 식약청, 국립보건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담당과장, ○ 관계부처에 회의결과 통보 (4. 19) - 언론대책방안 및 수산물 취급요령 홍보대책 통보
6. 조정결과	○ 해양수산부, 국립보건원, 시·도 등 관계기관간 사전협조체계 구축 - 주의보 발령 및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 일선보건소의 전염병 발생 신고 접수시, 즉각 국립보건원·해양수산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대책 협의 ○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의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 자제 요청 방안 강구(국정홍보처, 시·도)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 및 수산물 취급요령 홍보 강화 - 뉴스 방송, 기획보도, 반상회보 등

1. 과제명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정부 단일안 마련
2. 발굴배경	노사정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요청
3. 과제내용	○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회의시 세부쟁점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입장 수립
4. 주요쟁점	○ 시행시기, 단결체명칭, 노동권인정범위, 조합전임자, 분쟁조정기구, 가입대상, 조직형태, 교섭대상, 복수노조 등
5. 조정경과	○ '02.2.16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1차) ○ '02.2.26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2차)
6. 조정결과	○ 정부입장을 확정, 2.27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행정자치부) * 시행시기 : 3년 유예 단결체명칭 : 공무원조합, 또는 단체 노동권인정범위 : 단결권, 협의권 조합전임자 : 불인정, 단, 무급휴직 가능 가입대상 : 6급이하중 관리·운영 및 공안·질서유지업무 수행자 제외 조직형태 : 국가공무원 전국단위, 지방공무원 광역 시도단위 교섭대상 : 보수,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복수노조 : 허용(교섭창구 단일화 전제)

1. 과제명	주5일 근무제 관련 정부 입법안 조정
2. 발굴배경	노사정위원회 노사협상 결렬에 따른 정부입법 추진
3. 과제내용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세부내용 수립
4. 주요쟁점	임금보전문제,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및 할증률, 연차휴가 일수 가산기준, 주휴일 유·무급 등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8.17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등 관계부처 실무회의 수회개최</li> <li>○ '02.9.5 등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 5회 개최</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입법안 내용을 확정, 9.9부터 입법예고 실시</li> </ul> <p>* 월차 폐지, 연차휴가일수 15~25일(2년당 1일 가산)</p> <p>초과근로시간 상한선 :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p> <p>초과근로시간 할증률 : 최초 4시간분은 25%, 나머지는 50%</p> <p>임금보전문제 : 기존임금 수준 유지 원칙을 법부칙에 명시</p> <p>시행시기 : '03.7~'06.7까지 단계적 실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위임</p> <p>주휴일 :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수렴, 결정</p>

1. 과제명	주5일 근무제 실시 대비, 사전준비대책 수립
2. 발굴배경	주5일 근무제 관련 노사정위 논의 진전에 따라 준비
3. 과제내용	주5일 근무제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
4.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 인프라 확충방안 및 가족중심의 여가 활성화방안</li> <li>○ 주5일 수업 대비 학생지도 및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책</li> <li>○ 중소기업지원대책 및 인력구조변화 대책 등</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5.9 28개 부처에 공문을 시달, 각 부처 준비사항 제출 지시</li> <li>○ 02.6.21 복지노동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 개최</li> </ul>
6. 향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각 부처에서 수정 및 보완필요사항 검토중</li> <li>○ 9월중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세부내용 확정·발표 예정</li> </ul>

1. 과제명	비상시 국가기간산업 정상화를 위한 대체 군인력 확보
2. 발굴배경	국방부에서 요청
3. 과제내용	불법파업 장기화 등 유사시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체투입할 군인력의 투입분야 및 규모 조정
4.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 군인력 투입분야 및 인력규모 조정</li> <li>○ 대체 군인력 양성 및 관리 방법</li> <li>○ 대체 군인력 위탁 교육 등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원칙 확립</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4.19 공공부문 불법파업 대비 대체 투입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소요 파악 실시</li> <li>○ '02.5.7 복지노동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 개최</li> <li>○ '02.9월중 세무계획 차관회의, 국무회의 보고예정(국방부)</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력 투입분야 : 현재 6개분야 7,700명 → 10개분야 4,290명으로 조정</li> <li>○ 군인력 투입이 필요한 분야를 ①사전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철도 등6개) ②자격보유자 등 가용자원 투입분야(4개분야) ③기타 단순인력 필요분야로 구분하여 관리</li> <li>○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받는 부처 또는 해당 교육원에서 지원키로 함</li> </ul>



1. 과 제 명	납검출 수입수산물 처리에 관한 정부 대응방안 마련
2. 발굴배경	○ 중국측에서 납 등 금속이물질 검출 수입수산물의 처리 관련, 한·중 수산당국회의(02.3.15) 개최를 요구해 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범정부적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요청
3. 과제내용	○ 납 등 금속이물질이 검출된 수입수산물 처리에 관한 관계부처 입장 조율
4. 이견내용	○ 중국측 입장 - 납 등 금속이물질이 검출된 경우, 납이 검출되지 않은 수산물을 포함하여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는 것에 대한 개선 요구 ○ 한국측(해수부) 입장 - 중국측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납 등 금속 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특별방안 제시 필요.
5. 조정경과	○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사회문화조정관 주재) - 일시 및 장소 : '02. 3. 11(월) 10:30, 소회의실(1008호) - 참석 : 국조실, 외통부, 해수부, 식약청 담당국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 관계부처에 회의결과 통보 (3. 13)
6. 조정결과	① 통상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해결 원칙 견지  ② 납 등 금속이물질 검출된 수산물만 반송·폐기 요구 관련 < 1단계 > ○ 납 검출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항의와 원인규명 요구 ○ 부적합 수산물 발견시 전량 반송하던 것을 해당 수산물 상자만 반송하는 것으로 중국측 요구 수용 < 2단계 > ○ 1단계 조치 실시후 일정기간(1년정도) 관찰 후, 납 등 검출되지 않을 경우 샘플링검사로 전환 ○ 우리나라 수입업자에 의한 사전 전량 금속탐지기감사 실시방안 강구

1. 과제명	자격관련법 통합 추진
2. 발굴배경	○ 규개위에서 추진중이던 자격기술제도의 통합 추진 사업을 교육문화심의관실로 이관('00.10)
3. 과제내용	○ 제39차 규제개혁위('99.9.17)에서 자격제도 규제방안 의결 -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통합·일원화하여 가칭「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 등 ○ 규개위 의결내용을 토대로 자격관련 통합방안 시안을 마련 입법예고
4. 이견내용	○ 교육인적자원부 -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의 통합법 제정 추진 - 자격정책심의회 의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함 - 자격기본법은 교육부총리가 총괄 ○ 노동부 - 자격제도 개편내용을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 반영 - 자격정책심의회 의장을 국무총리로 함 - 자격기본법을 현행과 같이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관리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 2001년 10월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 - 교육부, 노동부 등 담당국장 참석
6. 조정결과	○ 자격관련법 통합여부 - 통합법대신 당초 통합취지와 자격제도 개편내용을 자격기본법 개정을 통해 반영 ○ 자격정책심의회 위원장 - 위원장은 교육부총리로, 부위원장은 노동부장관으로 함 ○ 자격의 관리·운영체계 - 교육부총리는 자격정책 총괄, 자격기본법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

1. 과제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2. 발굴배경	○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관련법 개정 추진상황 점점 중 관계부처 이견으로 법개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파악, 조정
3. 과제내용	○ 2002년부터 확대되는 중학교 의무교육 경비부담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4. 이견내용	○ 의무교육 확대실시에 따른 재원부담 방안 및 법제화 방안에 이견 - 행자부 : 의무교육경비는 국가부담이 원칙이므로 지 자체의 봉급전입금 계속 지원 불가 - 기획예산처 : 2002년부터 확대 실시되는 의무교육은 학부모 부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만 국가에서 부담하고 지자체의 봉급전입금은 계속 지원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 2002년 10월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 -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담당국장 참석
6. 조정결과	○ 2002년부터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은 현행대로 부담하고 2005년도 이후의 부담 방안은 2004년 12월 31까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마련 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안 마련

1. 과제명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관련
2. 발굴배경	교육인적자원부 요청
3. 과제내용	<p>○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졸업(예정)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일정 시간을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부여</p> <p>⇒ 실업계고교 간호계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 미부여</p>
4. 이견내용	<p>○ 교육인적자원부</p> <p>- 실업계고교 간호계학과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부여</p> <p>○ 보건복지부</p> <p>- 실업계고교 간호계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 부여시 간호조무사 인력과다 배출 등 문제발생 → 응시자격 부여 곤란</p>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p>○ 2002월 7일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p> <p>-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법제처 담당국장 등 참석</p>
6. 조정결과	<p>○ 조정결과</p> <p>- 실업계고교 간호계학과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다만, 인력과다 배출로 인한 공급과잉 상태를 감안하여 현재 간호계학과 정원수준에서 운영</p>

1. 과제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관련
2. 발굴배경	○ 문화부에서 조정 요청('01.9.13)
3. 과제내용	○ 사업개요 - 게임제공업소외의 일반업소(음식점, 문방구 등)에서의 게임물의 설치장소(영업시설 내부·외부) 제한 문제
4. 이견내용	○ 게임물의 설치장소 제한문제 - 문화부 : 영업시설 내부에 한정 - 산자부 : 영업시설 실내외 구분없이 설치가능
5. 조정회의	○ 10.8(월) 사회문화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문화부, 산자부) 국장회의
6. 조정결과	○ 일반업소의 영업소에 게임물을 설치토록 함 ○ 영업소의 범위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되 구체적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정함 ○ 문화부는 하위법령으로 영업소의 범위를 정할 때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함

1. 과제명	폐광카지노 관련 지방재정 확충
2. 발굴배경	○ 강원도에서 건의
3. 과제내용	○ 강원도가 건의한 ① 폐광카지노가 납부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 조정, ②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정률 강원도 지정배정, ③ 법인세인하 및 지방세 확충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 이견조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향 조정(초기5년 10%, 6년 이후 20%이내⇒초기5년 20%이내, 6년이후 3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 : 강원도의 소액주주에 대한 설득 및 토론회 개최결과에 따라 추진</li> </ul> </li> <li>○ 관광진흥개발기금의 50%이내에서 강원도에 지정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부 : 관광기금이 전국적인 관광진흥재원이므로 특정지역 지원 곤란</li> <li>- 예산처 : 사업별로 운용되는 기금체계상 수용 곤란</li> </ul> </li> <li>○ 법인세 인하 및 지방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부 : 법인세인하시 타업종과의 형평성문제 발생</li> <li>- 행자부 :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찬성</li> </ul> </li> </ul>
5. 조정회의	○ 5.10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개최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비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에서 '05년까지는 현행 10%를 20%로 인상</li> <li>- 강원도에서 소액주주에 대한 설득작업을 우선 추진</li> </ul> </li> <li>○ 관광진흥개발기금의 50%이내에서 강원도 지정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도 지정배정 수용 곤란.</li> <li>- 기금운영시 문화관광부가 강원도에 용자지원을 적극 추진</li> </ul> </li> <li>○ 법인세율 인하 및 지방세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세율 인하는 불수용</li> <li>- 강원도의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레저세 도입 검토</li> </ul> </li> </ul>

☐ 審查評價調整官室 ☐

1. 과제명	21C동북아 항만물류중심국 도약을 위한 항만정책 평가
2. 발굴배경	○ 자체 발굴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은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핵심산업임</li> <li>○ 동북아 경제권 확대 및 특히, 중국지역의 물동량 증가에 따라 이를 선점하기 위한 주변항만간의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시설의 적기 확충 및 항만운영 선진화를 위한 정책역량집중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li> </ul> </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안컨테이너용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li> <li>-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제도 통합방안 강구</li> </ul> </li> <li>○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운영기본계획 수립 의무화</li> <li>- 부두운영회사제 임대기간 장기화</li> <li>- 연근해컨테이너 운송사업 신설</li> </ul> </li> <li>○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개발투자재원중 정부재정투자 확대</li> <li>-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재정융자 등 지원확대 검토</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 7일 심사평가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회의</li> <li>○ 11월 28일 정책평가위원회 개최</li> <li>○ 12월 11일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급회의 개최</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되는 연안컨테이너 운송사업에 대한 면세유 공급 추진</li> <li>- 관세자유지역 운영개선은 최초 지정후 2년 이내 실시</li> <li>- '02년까지 중장기적 항만운영 기본계획 수립</li> <li>- 연근해 컨테이너 운송사업 신설</li> <li>- 항만투자비중의 확대 및 항만시설의 매각등 추진</li> <li>- 배후단지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 강구</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법, 해운법, 관세자유지역에 관한 법률등 개정추진 필요</li> </ul> </li> </ul>



1. 과제명	벤처기업 육성시책 평가
2. 발굴배경	<p>2001년 중순부터 벤처기업의 역량 제고 및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벤처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성과를 집중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p> <p>&lt;예&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월2일 조선일보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들의 벤처펀드결성은 KTB네트워크 370억원 등 4건(총734억원)으로 지난 5월 이후월별 벤처펀드 결성규모중 최고치</li> </ul> </li> <li>○ 8월8일 조선일보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이용 변칙벤처투자 공무원 66명 적발</li> </ul> </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성과 및 미비점을 중간점검</li> <li>○ 벤처기업 확인제도, 창업지원, 입지지원, 자금·기술·인력지원 등 시책에 대해 정책수단의 적절성, 추진체계의 효율성 등을 평가·조정</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폐지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li> </ul> </li> <li>○ 금감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코스닥 등록시 재무요건을 도입해야 함</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월4일 유종상 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평가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확인제도 등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li> </ul> </li> <li>※ 기타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해 부처간 이견을 합의·조정 등</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존속키로 하고, 벤처기업의 혁신능력을 확인요건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li> <li>- 금감위 의견대로 코스닥 등록시 재무요건을 도입</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기업특별법 개정('02.7.31)</li> <li>- 벤처기업협회 등록규정 개정('02.7.12)</li> </ul> </li> </ul>

1. 과제명	초·중·등 교육정보화 추진실태 평가
2. 발굴배경	<p>&lt;자체 발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국책교육진흥사업으로서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동안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하드웨어 중심의 정보화 기반을 토대로 교원정보화 능력 강화, 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 등 교육현장에서 활용도 제고</li> </ul> </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근무요원 배정시 전산관련 전공자 학교에 우선 배정”에 대해 병력인적자원 부족으로 특정부처에 배정 곤란</li> </ul> </li> <li>○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형태의 원격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 등의 저작권 행사제한 범위확대 곤란</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2.6, 심사평가2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조정 회의</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근무요원 우선배정 관련(병무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교육청, 각급학교 등 교육관련기관에 전산관련 전공/자격자 우선 소집토록 소집순위 개선</li> <li>※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제16조 개정('02.3.20)</li> </ul> </li> <li>○ 저작권법 개정 관련(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목적 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노력</li> <li>※ 저작권법심의조정위원회에 교육부 관계자 1인과 관련전문가 1인 추천 반영</li> </ul> </li> </ul>

1. 과제명	공공부문 정보자원관리 실태 평가
2. 발굴배경	○ 자체발굴
3. 과제내용	○ 정보자원 관리체계 및 지침 정비 ○ 국가 통합전산환경 조기 구축
4. 이견내용	○ 행정자치부 - 행정부문의 전산자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리
5. 조정경과	○ 4월23일 국무총리 주재 평가보고회 개최 -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소위원 등), 관계부처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 과제검토를 위한 정책평가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공공부문 전산자원 관리 사업을 정부방침으로 추진하고 공동주관과제는 부처간 협의 추진 -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범정부적 전산환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혁신방안 (BPR) 수립

□ 規制改革調整官室 □

1. 과제명	대학원대학에 대한 규제내용 조정
2. 발굴배경	○ 2002.3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제출
3. 과제내용	○ 수도권내 대학원대학에 대한 신·증설인원 제한 조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대학도 수도권 총량 규제에 포함하여 전문대학에 준하여 규제(연간 3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학원대학의 신·증설 허용)</li> </ul> </li> <li>○ 교육인적자원부 : 증원인원 300 → 400명으로 확대</li> <li>○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등 첨단분야는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제외</li> </ul> </li> <li>○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대학 규제신설은 국가인재육성계획과 상충되고 기존 대학원대학원 증원기회를 봉쇄하는 것이므로 추가규제 철회</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4.10 규개위 경제1분과위 심의(관계부처 참석)</li> <li>○ 규제개혁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02.4.19)</li> <li>○ 2002.5.1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개최</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 억제를 위해 수도권내의 대학원대학의 신설·이전·증원을 수도권내에서의 행위제한 대상에 추가하고, 입학정원의 총증가수를 매년 300명 이내로 제한하되,</li> <li>- 지식산업 육성차원에서 컴퓨터, 통신, 디자인 등 첨단분야의 대학은 그 증가수의 산정에서 제외</li> </ul> </li> <li>○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에 반영(2002.6)</li> </ul>

1. 과제명	간선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의무 조정
2. 발굴배경	○ 2001.10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제출
3. 과제내용	○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 시 간선시설 설치 및 비용 부담의무 조정
4. 이견내용	○ 건설교통부 -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시 도로, 전기, 통신, 가스 공급시설은 지자체, 시설별 간선시설 공급자가 설치 하고 그 설치비용을 부담  ○ 산업자원부 - 전기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비용부담 의무 삭제
5. 조정경과	○ 2001.10.31 규개위 경제1분과위 개최 ○ 2001.11.9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전기·가스공급은 민간의 경제 활동에 관한 사항으 로 법으로 비용부담자를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공 급자의 비용부담 의무는 삭제하되, 이에 대한 설치 의무는 한시적 존치(3년 일몰제 적용)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반영·개정 추진(2001.11)

1. 과제명	이동식 CNG(천연압축가스) 충전소 시설기준 조정
2. 발굴배경	○ 산자부 소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3. 과제내용	○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를 위해 이동식 CNG충전소 도입 및 관련기준을 신설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식 CNG자동차 충전소는 대부분 도심에 위치한 차고지에 설치되고, 충전압력이 대기압의 200배 이상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동식 CNG충전소의 시설기술기준을 기존의 고정식 충전소와 동일하게 적용</li> </ul> </li> <li>○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식 충전소의 설치기준을 고정식 충전소보다 대폭 완화하고, 동 법 시행 이전('01.7.27 대통령 지시 이후 설치된 충전소)에 설치된 이동식 충전소에 대해서는 동 기준 적용 배제</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 제179차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개최 ('02.8.14)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자부의 안대로 이동식CNG충전소의 시설기준을 고정식과 동일하게 적용</li> <li>○ 다만, '03.3월말까지 CNG충전소와 기존주유소를 병설하는 문제, 외국과 비교하여 CNG충전소 안전기준의 적정성 문제, 고정식·이동식 충전소의 안전성 비교분석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규개위에 보고</li> </ul>

1. 과제명	ISO 14001과 환경친화기업제도의 통합
2. 발굴배경	○ 산업자원부의 2001년 7월부터 9월까지 기업활동 규제·경영애로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건의사항
3. 과제내용	○ 산업자원부의 ISO 14001과 환경부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 요망
4. 이견내용	○ 산자부 - 제40회 규제위 결정내용대로 모든 ISO 14001 지정업체에 대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필요 ○ 환경부 - 두 제도의 평가항목이 완전 일치하지 않고 친환경기업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따른 업체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모든 ISO 14001 지정 업체에 대한 지정 곤란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 제88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2001.12.7)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두 제도는 친환경기업경영 관련 제도이므로 장기적으로 통합하여 일원화 - 통합전까지는 환경부에서 현행 1차 평가항목 면제외에 2차 평가항목을 환경오염저감계획·벌칙·민원사항 외에는 ISO 14001과 같은 내용의 항목으로 대폭 조정 하여 동일항목을 면제함으로써 ISO 14001 지정업체가 친환경기업 지정을 원할 경우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환경친화기업과 ISO14001인증업체의 우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친화기업관련 규정이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로 일원화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으며 동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시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반영예정



1. 과제명	산지관리법 제정
2. 발굴배경	○ 2001.10.11 산지관리법 제정안 규제심사 요청(산림청) - 국토난개발방지 등을 위해 보전임지전용·산림형질변경, 채광·채식 등에 관한 사항을 산림법에서 분리·보완
3. 과제내용	○ 광구안에서의 채석허가대상 광물확대 및 산지전용지역내 광산부산물의 채석허가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산자부간 이견
4. 이견내용	○ 산림청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광석을 석재로 사용·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채석허가(공·사유림)를 받거나 매매계약(국유림)을 체결하여야 함(산지관리법안 제27조제2항) - 광산부산물로 발생한 석재도 채석허가 및 매매계약대상임(산지관리법안 제25조제5항 및 제35조제4항) ○ 산자부 - 광물의 채취는 광업법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므로 암석을 대상으로 하는 채석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규제임 - 광물은 용도제한이 없으므로 품위 이상의 광물을 골재로 사용·판매시는 광업권자 임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 2001.10.19 규제개혁위원회(경제2분과) 개최·의결 ※ 동일내용은 광업법개정시 규제개혁위원회(2002.9.12. 경제1분과)에서 기 검토한 바 있음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산림청안으로 조정 ○ 후속조치 - 산지관리법안 국회제출 : 2002. 4

□ 水質改善企劃團 □

1. 과제명	세계 물의날(3.22) 행사 준비
2. 발굴배경	○ 자체발굴
3. 과제내용	○ 물의날 행사 준비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건교부가 행사 주관문제로 이견 지속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년과 동일하게 환경부 주도하에 행사계획을 수립 • 추진</li> <li>- 국민건강 및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물의 중요성 홍보</li> </ul> </li> <li>○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전에는 환경부 주도로 행사가 추진되었으나, 금년에는 주제를 감안하여 건교부 주도하에 행사계획을 수립 추진</li> <li>- 경제 • 사회발전을 위한 수자원의 중요성을 부각</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총괄부장 주재 환경부 • 건교부과장 조정회의(02.2.4)</li> <li>○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02.2.15)</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국무총리실(수질개선기획단) • 환경부 • 건교부등 3개기관 합동으로 ‘물의날 행사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li> <li>- 행사내용별 총괄부서를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기념식 : 환경부</li> <li>• 물관련심포지엄 및 홍보 : 환경부</li> <li>• 정책홍보자료 제작 : 건설교통부 등</li> </ul> </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없음</li> </ul>

1. 과 제 명	통합정수장 건설비부담 개선 추진
2. 발굴배경	○ 72개 관련 지자체장 건의('01.7.24)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안 :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부담</li> <li>- 제2안 : 특별교부세 지원, 정수요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li> </ul> </li> <li>○ 관련 제도개선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상수도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통합정수장 건설 계획의 타당성 검토 강화 등</li> </ul> </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의 수공부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없음</li> <li>○ 다만, 물값현실화 목표연도 등을 수도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일부 이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예산처 : 물값현실화 목표연도를 수도법에 명문화</li> <li>- 재정경제부 :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곤란</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방안 마련 : '01. 7~8월(1차안), '01. 9~11월(2차안)</li> <li>○ 관계부처 및 관련지자체 의견협의('01.11.23~11.27)</li> <li>○ 관계부처 국장회의('01.12.3)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예산처등 5개 중앙행정기관 및 4개 지자체 대표참석</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정수장 건설비용을 수자원공사가 부담</li> <li>- 광역상수도 요금을 2004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li> <li>※ 수도법 개정을 국회에 기 제출중인 의원입법으로 추진</li> </ul> </li> <li>○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정수장건설비 제도개선안」 관계부처에 시달('01.12.5)</li> <li>- 수도법개정 추진(환경부)</li> </ul> </li> </ul>

1. 과 제 명	환경기초시설투자 재원 조달방안 강구												
2. 발굴배경	○ 부처요구(환경부) - 기초환경시설투자재원 확충 방안 요구												
3. 과제내용	○ 지방양여금 사업중 도로정비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간의 배분비율 조정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사업의 추가재원 확보												
4. 이견내용	○ 환경부 - 수질개선사업비 투자재원 확충 ○ 행정자치부 - 지방양여금 재원이외 별도 투자재원 확보 ○ 기획예산처 - 지방양여금 재원 범위내에서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 확보												
5. 조정경과	○ '01. 12. 15 지방양여금농특세전입금 확충(기획예산처) ○ '01. 12. 20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의 지방양여금 농특세 전입금(농어촌 하수도사업)에 따른 재원분담 직권조정												
6. 조정결과	○ 지방양여금법 개정('01.12.29 법률 6550호) - 환경기초시설 양여금배분비율 확대 <table border="1"><tr><td>구분</td><td>당초</td><td>개정</td><td>비고</td></tr><tr><td>주세</td><td>40%</td><td>46.6%</td><td>6.6% P증</td></tr><tr><td>농특세전입금</td><td>19/150</td><td>23/150</td><td>4/150 증</td></tr></table> ○ 지방양여금법 개정 및 농특세전입금 확충으로 수질오염 방지 투자재원 9,629억원 매년 추가 조달	구분	당초	개정	비고	주세	40%	46.6%	6.6% P증	농특세전입금	19/150	23/150	4/150 증
구분	당초	개정	비고										
주세	40%	46.6%	6.6% P증										
농특세전입금	19/150	23/150	4/150 증										

1. 과제명	영월댐 관련 주민지원대책 국비지원 조정
2. 발굴배경	○ 강원도에서 주민지원대책 확대 건의('01.3)
3. 과제내용	○ 국비지원기준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또는 증액교부금 지원요구 <국비지원 요구사업> - 비닐하우스 자동화(100동) - 축사신축(10동) - 접근도로망 확충 등
4. 이견내용	○ 행자부 - 국가계획으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이므로 지방비적 성격을 갖는 특별교부세 지원곤란 ○ 기획예산처 - 추경편성 불확실, 사업성격 등을 감안할 때 증액교부금 편성은 현실적으로 불가
5. 조정경과	○ 총리실주재 관계부처 회의개최('01.4.17) ○ 기획예산처·행자부 등 협의조정('01.5~6)
6. 조정결과	○ 시급성·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우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02년 증액교부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협의 - 영농지원사업비 77억원은 '02년 증액교부금으로 지원 ※ 지원기준이 있는 122억은 '01-'02년 예정대로 지원 -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01년 42억 특별교부세 지원, '02-'05년도중 195억 지방양여금 지원

1. 과제명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사항 조정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교부의 지하수 유량계, 오염측정관 등 시설 설치 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농림부, 농민 등 반대</li> </ul> </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교부는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지하수 개발시 허가 또는 신고토록 지하수법 개정('01.1)</li> <li>- 후속조치로 시행령 개정 추진</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톤/일 이상은 유량계, 오염측정관 등 시설 설치</li> </ul> </li> <li>○ 농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설치대상이 36만4천개가 추가되어 농민반발 우려가 있으므로 완화 요구</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관회의등을 통한 관계기관 이견조정</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농업용 지하수는 유량계 등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오염방지시설을 보완하기로 협의</li> <li>- 지하수법시행령 개정완료('01.12.19)</li> </ul>

1. 과제명	동강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면적 조정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8.6.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고시 발표(환경부)</li> <li>- '02.8.7.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없이 지정·고시하는 것에 대한 이견 조정 요구(산림청)</li> </ul> </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월 댐 건설 백지화 이후, 정부정책으로 동강환경보전대책 수립('00.1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휴식지 지정(강원도) 및 생태계보전지역 지정(환경부)</li> </ul> </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64.97km<sup>2</sup>를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고시</li> </ul> </li> <li>○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보전지역 지정 면적중 국유지 13.28km<sup>2</sup>를 제척 요청</li> </ul> </li> </ul>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02.8.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와 산림청 협의를 거쳐 조정</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에서 제척을 요구한 지역에 대해 향후 2단계 지정시 그 지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환경부가 산림청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li> <li>○ 산림청이 시행하는 산림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동강유역 산림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연차별 산림사업계획을 환경부에 통보하면 이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협의한 것으로 인정</li> </ul>



1. 과제명	국립공원구역조정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1.11.24. 국립공원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이견조정 요청(환경부)</li> <li>- 국립공원구역조정(안)에 대해 다른 관계부처와는 협의되었으나 산림청과는 협의난항</li> </ul> </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내 주민 불편해소 및 공원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공원구역 해제 및 자원성이 좋은 신규지역 공원편입</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인근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202km<sup>2</sup>를 공원으로 편입</li> </ul> </li> <li>○ 산림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km<sup>2</sup>만 공원 편입</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01.12.7)</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 천연보호구역(5km<sup>2</sup> 상당) 및 해면(43km<sup>2</sup> 상당)은 공원구역 편입</li> <li>○ 육지 공원보호구역(77km<sup>2</sup> 상당)중 산림사업에 반드시 필요하여 공원구역에서 제외되어야할 지역은 산림청이 환경부에 제시하여 협의 • 결정</li> <li>○ 설악산지역(28km<sup>2</sup> 상당) 및 일반산림지역(49km<sup>2</sup> 상당)중 산림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공원구역 편입제외</li> <li>○ 공원으로 신규 편입되는 지역내에서의 산림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위는 환경부와 별도 협의없이 가능토록하는 지침을 환경부와 산림청이 협의하여 명문화(협약서 체결)</li> </ul>

1. 과제명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전기료 인하
2. 발굴배경	○ 자체발굴('01년 봄가뭄 대책 현지출장시) - 도서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의 전기료가 비싸 운영 애로
3. 과제내용	○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전력비용의 과다로 주민들이 시설 사용을 기피하는 등 문제점 대두 - 도서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해 '96년부터 해수담수화 사업 추진('01년까지 37개 완료, 현재 23개 시설을 추진중)
4. 이견내용	○ 환경부 - 도서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산업용(58.3원/kw)에서 농업용(24.3원/kw)으로 완화 필요 ○ 산업자원부 - 민영화를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전기요금 완화를 요구하는 다른 시설(빗물배수펌프장 등 10종)과의 형평성 등으로 어려움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 사업지원 부장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02.6.26)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관리비용 등이 주민복지차원에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 추진 - 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주민부담 경감방안, 표준모델 개발, 운영·관리지침 수립 등 장단기 대책 마련·추진(연구용역 수행중)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없음

1. 과제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관련
2. 발굴배경	○ 부처요구(환경부) - 2003년 시행예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중 관계부처와 업계등의 이견제기로 조정요청
3. 과제내용	○ 동법에 폐기물발생의 최소화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예치금제’를 폐지하고 생산자에게 제품·포장재 폐기물의 회수와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  ○ EPR 대상품목 및 시행시기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4. 이견내용	<휴대폰> ○ 환경부 : 휴대폰을 EPR대상으로 하되, 시행시기를 1년으로 유예 ○ 산자부·정보통신부 : EPR대상포함에 반대  <컴퓨터 CDT 모니터> ○ 환경부 : 03년부터 시행 ○ 산자부 : EPR대상포함에 반대
5. 조정경과 (또는 조정계획)	○ 기획총괄부장 주재 관련부처 과장회의(02.8.6) ○ 기획총괄부장 주재 관련부처 국장회의(02.8.22)
6. 조정결과	○ 조정결과 - 휴대폰은 대상품목에 포함하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고, 제도시행 초년도의 재활용의무량은 시행전년도의 재활용 수준으로함 - 컴퓨터 CDT 모니터는 03년에 시행하되, 시행초기 재활용의무량 산정시 관련업계의 실정을 고려토록함 ○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사항 - 시행령개정에 조정결과 반영

☐ 安全管理改善企劃團 ☐

1. 과 제 명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 안전대책 수립
2. 발굴배경	건축물 붕괴 사고시 인명피해와 함께 안전상 문제제기
3. 과제내용	소규모 건축물은 재난관리대상시설이 아니므로 붕괴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4. 이견내용	안전대책 마련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점검 및 관리에 있어 재난관리법(행자부)과 건축법(건교부) 등에 다소 이견을 보임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 안전대책 회의 개최(2001. 9. 19)</li> <li>○ 소규모·불량건축물에 대한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행자부에서 전국 시·도에 안전 점검토록 기 시달(2001. 8. 8~12.31)</li> <li>○ 시·도, 시·군·구 단위로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구성 추진</li> <li>○ 규제완화로 건축물 구조·용도변경 등 안전관리 취약</li> <li>○ 건교부 「건축제도의 장기 발전방안」 용역결과(2000. 12. 20~2001. 10. 20)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법령 제정 등 항구대책 마련</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관리 민간기술자문단 구성완료(행자부, 2001. 9. 30)</li> <li>○ 건축물 유지관리기준 등 건축법 전반적인 사항 개정 추진중(건교부)</li> <li>○ 소규모 불량건축물에 대하여는 재난위험시설로 지정·관리</li> <li>○ 부처별로 제도개선 사항은 지속 추진중</li> </ul> <p>※ 건축법 개정 추진 일정 계획(건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3 : 자치단체 및 건축위원회 의견 청취</li> <li>• 2002. 4 : 건교부(안) 확정, 규제개혁위원회 상정</li> <li>• 2002. 8 : 입법예고→법제처 심사(11월)→차관회의·국무회의</li> <li>• 2003 상반기 법령 개정안 공포</li> </ul>

1. 과 제 명	대형·고층건축물 등 안전관리대책 추진
2. 발굴배경	美 테러사건이후 대형·고층건물을 비롯한 산업단지·원전시설 등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고조
3. 과제내용	대형·고층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고층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시달</li> <li>○ 고층건물·산업단지시설 등에 대한 추진사항 및 대책설명</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고층건축물 안전관리대책 회의 개최(2001. 9. 26)</li> <li>○ 건축물 내화기준 및 복도·피난계단 설치기준 강화(행자·건교부)</li> <li>○ 규제완화로 인한 건축물 용도변경 등 안전 취약문제 해소(건교부)</li> <li>○ 지하차도·지하상가·복개교량 등 안전점검 대상시설 추가 검토(건교부)</li> <li>○ 복합상영관 소방안전대책 마련 및 관계법령 개정(행자·건교·문광부)</li> <li>○ 각종 교육시 「재난업무」를 필수과목으로 선정 검토(각 부처)</li> <li>○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마련(산자부)</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차도·복개교량 등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안전 점검대상 시설로 개정 공포('02. 1. 14) 후, 동법 시행령 개정추진</li> <li>○ 기타 부처별로 각 개별법령의 제도개선 사항은 지속 추진중</li> </ul>

1. 과 제 명	공동구 안전관리대책 추진
2. 발굴배경	지하 공동구 화재발생 등으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불안감 고조
3. 과제내용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필수시설이 집중된 지하 공동구(수용시설 : 전력·통신·난방·상수도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설치기관·자치단체의 소요재원 확보 및 기관별 비용 부담내역 등과</li> <li>○ 소방법시행령 개정('94. 7)이전에 설치한 소방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다소 이견이 있음.</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구 중앙합동점검실시(2000. 3.2~3. 11)</li> <li>○ 공동구 개선대책 이행실태 합동점검(2000. 12.18~12. 20)</li> <li>○ 공동구 관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검토(건교부)</li> <li>○ 자동화재탐지설비·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 의무화(행자부)</li> <li>○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국정원)</li> <li>○ 관리사무소·설치기관·소방서간 화재발생 동시인지장치 설치 및 중앙통제시스템 구축 보강</li> <li>○ 맨홀·환기구 등으로 외부인 침입용이 및 인화물질·화기 등의 투입 가능 대처</li> <li>○ 공동구관리 협의회 구성·지자체 조례정비 및 보안관리지침 등 제정</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법 개정(2000. 7~2001. 7)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연소방지설비 등 소방시설은 2002. 8월 한 설치 추진 중에 있음</li> <li>○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개정 완료</li> </ul>

1. 과 제 명	국가산업단지 지하매설배관 안전관리 강화
2. 발굴배경	각종 지하매설배관의 통합안전관리체제 미흡으로 유사시 신속한 대응곤란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필요
3. 과제내용	국가산업단지내 지하매설배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방안 마련
4. 이견내용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마련 및 운영방안, 운영기관 등 산자부 대책안에 대한 관계기관 회의개최 등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매설배관 관련 제도개선대책 관계부처 회의 및 부처별 제도개선 방안 통보('00. 7. 15)</li> <li>○ 지하매설배관 안전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6. 18)</li> <li>○ 지하매설배관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개최(7. 19)</li> <li>○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우리실에서 마련한 지하매설배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추진방안 마련 통보(8. 4)</li> <li>○ 산자부에서 종합대책안 마련 제출(11. 23)</li> <li>○ 산자부 대책안에 대한 관계부처 검토회의 개최(11. 29)</li> <li>○ 국가산업단지 종합 안전관리개선대책 통보(12. 21)</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로 각 개별법령의 제도개선사항은 지속 추진중</li> <li>○ 관계부처 회의개최 결과를 토대로 국가산업단지 종합 안전관리개선 대책 통보</li> </ul>



1. 과 제 명	신중 자유 이용업 안전관리 대책
2. 발굴배경	신중 자유이용업은 신고나 허가 등 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안전·위생 등 행정적 관리 및 지도 소관부처(행정기관)의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3. 과제내용	신중 자유 이용업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 등 안전관리 대책마련
4. 이견내용	신중 자유 이용업에 대하여 일부 부처에서 소관사항이 아님을 주장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업종의 소방안전 일제 안전점검 실시(2000. 5월)</li> <li>○ 안전관리대책 마련 철저 및 추진상황 제출통보('00. 8월)</li> <li>○ 신중자유업종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관련 회의개최('01. 12. 11)</li> <li>○ 신중자유업종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통보('02. 1. 14)</li> <li>○ 화상대화방 소관부처 지정 재검토 요청(문광부, '02. 1. 29)</li> <li>○ 화상대화방 소관부처 지정 재검토를 위한 회의개최('02. 3. 22)</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중자유업종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통보 대상 8개 업종중 화상대화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 조정중</li> </ul>

1. 과 제 명	복합상영관 안전관리 대책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상영관이 백화점 등 상시 다수인이 출입하는 대형 건물내에 다양한 시설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화재위험성 상존</li> <li>○ 획일적 피난계단으로 일시에 다수인 피난 곤란 대형 인명 피해 우려</li> <li>○ 복합상영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통로 확보 미흡으로 화재시 급격한 연소 확대 우려 등</li> </ul>
3. 과제내용	복합상영관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 대책마련
4. 이견내용	안전관리 대상이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로 다수의 부처가 해당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01.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영관의 수용인원을 고려한 긴급피난을 위한 복도 확보</li> <li>- 수용인원 500명이상인 복합상영관 전용피난계단 설치 ⇒ 건축물의 구조·기능 등을 종합 검토, 반영여부 결정(건교부)</li> <li>- 실내마감재료 및 흡음재등 불연화 사용 강화 ⇒ 용역결과 개정반영(건교부)</li> <li>- 재해대처계획의 소방안전 강화(등록시 계획제출) ⇒ “영화진흥법” 개정예 반영(문광부)</li> <li>- 지하층 및 지상 5층이상에 복합상영관 설치 제한방안 강구 ⇒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한방안을 강구(문광부)</li> <li>- 스프링클러등 자동소화설비 설치 및 방염성능기준 강화 추진(행자부)</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소관업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중</li> <li>○ 공연법 시행령 개정시 안전관련사항 반영</li> </ul>

1. 과 제 명	재난관련 신고전화 일원화
2. 발굴배경	각종 재난관련 긴급신고전화는 119로 통합하여 국민의 혼선방지 및 대응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3. 과제내용	현재 화재·구조구급 119, 전기사고 123, 환경오염 128, 가스사고 지역국번-0019 등 부처별·기능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재난 관련 긴급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
4. 이견내용	기존의 특수번호 폐지예상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체제 미흡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기관 관계자회의('00. 3. 15)</li> <li>○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발표('00. 9.)</li> <li>○ 신고통합시스템 구축계획수립('01. 5. 15)</li> <li>○ 유관기관 합동회의('01. 12. 6)</li> <li>○ 신고통합시스템구축 사업 계약('01. 12. 21)</li> <li>○ 유관기관 실무자회의 개최('02. 1. 11)</li> <li>○ 각 기관 추진상황 제출요구('02. 3. 14)</li> <li>○ 각 기관 추진상황 제출자료 검토회의 ('02. 4. 예정)</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7 1 부터 통합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관련기관 회의 소집등 조정 지속 추진</li> </ul>

1. 과 제 명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등 안전관리 대책
2. 발굴배경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시 확대가 빨라 소화가 곤란하며, 노후전선·전열기구 등의 취약시설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가건물 형태의 경우 대부분 무허가이며, 주거자들의 입출이 빈번하여 현황파악·관리 곤란에 따른 대책강구
3. 과제내용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소방 안전관리 대책마련
4. 이견내용	전기·가스등 관련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등 업무조정 필요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 대책회의 2회 개최 (3.4, 7.24)</li> <li>○ 실태조사 및 소방안전점검 실시(3.8~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3,060개소, 불량시설 788개소 시정조치 및 보완</li> </ul> </li> <li>○ 주거용비닐하우스 화재예방등 안전대책 시달(8. 3)</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하우스 실태 「일제조사」 및 「합동점검」 실시(8월중)</li> <li>- 신규발생 강력대응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li> <li>-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시설 소방안전대책 추진</li> <li>- 불법 주거시설 철거·이전 유도 및 시설축소 조치 등</li> </ul> </li> <li>○ 중장기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주택 알선 또는 전세자금 융자등 이주지원대책 추진</li> <li>- 일정기간 이전계도후 강력한 행정집행(강제철거) 등</li> </ul> </li> </ul>

1. 과 제 명	학원등 수련시설 안전관리 대책
2. 발굴배경	경기도 예지학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학원등 교육관련시설의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개선 관계부처대책 마련 필요
3. 과제내용	학원등 수련시설 안전관리 대책 마련
4. 이견내용	행자부, 건교부, 교육부, 복지부 등 다수의 관련부처와 관련 업무조정 필요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안전점검 실시 통보('01. 5. 18)</li> <li>○ 관계부처 대책 회의 개최 2회 (6.5, 6.28)</li> <li>○ 학원등 수련시설 안전관리 개선대책 통보('01. 7. 13)</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원등 수련시설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마감재·칸막이 등 내부자재 불연재 사용 의무화</li> <li>- 교육연구시설의 소화기 설치기준 강화</li> <li>- 옥외 피난계단 및 옥상 피난광장 설치 등의 기준강화</li> <li>- 복도·통로 협소 및 미로형태의 내부구조 개선</li> <li>- 「고시원(기숙독서실)」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근거 마련</li> <li>- 학원설립시 소방안전점검 결과표 제출 의무화 도입</li> <li>-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li> <li>- 독서실의 창문에 방음·차폐시설 설치 제한</li> <li>-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 제도 도입</li> </ul> </li> </ul>

1. 과제명	사업용 자동차 등 운행관리체계 사후관리 제도화
2. 발굴배경	자동차관리법령(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사업용자동차, 최대 적재량 8톤이상 화물자동차 등에 운행기록계에 대한 설치의무만을 규정, 사후관리 및 처벌관련규정 미비로 형식적 운영
3. 과제내용	과속단속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정확한 사고원인 분석을 위하여 운행기록계 사후관리 및 처벌 관련 규정 신설
4. 이견내용	제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관련규정 신설과 관련 대상 법령 및 입법기술에 이견 표출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관련사항에 대한 법개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2001. 7. 30/8.2)</li> <li>○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2001.9~12)</li> <li>○ 사업용 교통안전 종합대책 확정·시행(2002. 1)</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관리법 : 운행기록계 부착의무화 및 처벌강화</li> <li>○ 여객·화물 등 운수사업법 : 운수업자의 정상적 작동관리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li> <li>○ 도로교통법 : 운전자 정상작동 의무화 및 처벌규정 신설</li> <li>○ 교통안전법 : 교통안전진단제도관련 기록지 제출의무화 및 보존기간 설정</li> </ul>

1. 과제명	교통안전관련 각종 평가제 및 시상대회 개선
2. 발굴배경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실시되거나 계획중인 교통안전관련 평가제 및 시상이 7종류에 이르고 있어 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되어 발전방향 모색
3. 과제내용	각종 평가의 주체 및 대상, 기준, 결과 활용 등에 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향후 교통안전관련 평가제도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으로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
4. 이견내용	각각의 절차와 배경 등이 있어 평가 시기 및 평가 지표 조정, 위원회 교차구성 등에 대하여 이견 표출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관련 각종 평가제 및 시상대회 개선회의 개최 ('01. 12. 4)</li> <li>- 참석기관 : 건교부, 경향신문사, 대한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 시기는 각각의 시행 취지 및 배경을 감안, 현행 유지</li> <li>○ 평가 지표상 기준 시점 일치 및 선행평가 결과 반영 (교통안전관리 종합평가와 교통문화지수 조사 및 교통안전대상 등)</li> <li>○ 민간부문 시상대회의 경우 정부부문과의 조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 상호 교차 구성 및 분야별 특화를 통한 차별화 추진</li> </ul>

1. 과 제 명	제3차 사고잡은 곳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 관리강화
2. 발굴배경	○ 자치단체장 및 소관업무 담당자의 관심이 저조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강제규정 미비와 예산지원이 미흡하여 사업추진 실적 저조
3. 과제내용	○ 사업추진 총괄기획 및 조정관리기관 지정 ○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 확대 지급
4. 이견내용 (문제점)	○ 개선대상에 대한 공사현장조사등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의 협조 미흡 ○ 도로관리청의 사업계획 확정 등 업무추진상황 미 통보 등 정보공유 단절 ○ 기준에 미달되는 지점 선정 및 사고빈도가 높아 시급히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 방치
5. 조정경과	○ 교통사고위험지역 전수조사 실시('00.12.15~'01.3.15, 3개월) - 최근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확보 ○ 사고잡은 곳 개선사업 초안 관계부처협의 - 행 자 부 : 위험도로 개량사업도 병행추진 - 건 교 부 : 현장조사 및 개선도 작성시 도로기술자 참여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개선대상 물량조정
6. 조정결과	○ 제3차 사고 잡은 곳 개선사업 계획 확정 - 사업시행기간 : 2002 ~ 2006(5년) - 총사업량 : 3,556개소 (고속도 58, 국도 824, 지방도 1,485, 특별·광역시도 1,189) ○ 위험도로 개량사업 계획 확정 - 사업시행기간 : 2002 ~ 2011(10년) - 총사업량 : 6,280개소, 2조 8,692억원 ○ 자동차교통관리특별법개정('01. 12월말)하여 국비지원 확대 - '02년 국고보조금 112억 3,900만원 지원(경찰청) - '03년 국고보조금 확대지원계획



1. 과 제 명	도로·교통 안전시설 일제정비 추진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월드컵을 앞두고 적은 예산으로 단기에 개선·보완이 가능한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파악하여, 각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월드컵 이전에 일제 정비하여 월드컵 교통안전 확보</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개 월드컵 개최도시 및 지역내 유명관광지와 공항, 터미널 등에 이르는 도로상 도로·교통 안전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안전시설 : 도로표지,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시선유도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도로반사경, 충격 흡수시설 등</li> <li>- 교통안전시설 : 안전표지, 노면표지, 신호등, 기타</li> </ul> </li> </ul>
4. 이견내용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위치 부적정, 파손 찌그러짐, 시인장애, 정보상충, 중복, 혼재, 도색탈색, 비규격 설치</li> <li>○ 노선별, 구간별 안내지명이 실제 도로표지에 일관성, 연계성이 없이 표기</li> <li>○ 교차로에 방향예고표지와 방향표지 누락 설치</li> <li>○ 도로표지의 도안이 도로의 상황·형태와 불일치</li> <li>○ '97. 1월 개정된 「도로표적규칙」에 맞추어 표지판과 문자규격 미시정</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총 정비대상 4,204건의 92%인 3,856건 정비완료</li> <li>○ 도로·교통 안전시설 현지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02. 1.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표지판에 대하여 문자규격 및 영문표기오기 등 세부조사</li> </ul> </li> <li>○ 도로·교통 안전시설 일제조사('02. 2. 18 ~ 3. 9, 20일간)</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 월드컵 이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결과 통보 : '02. 3. 20</li> <li>- 정 비 완 료 : '02. 5. 20</li> <li>- 결 과 보 고 : '02. 5. 25</li> </ul> </li> </ul>

1. 과 제 명	화물자동차 과적운행 예방대책(단속 일원화) 추진
2. 발굴배경	<p>화물자동차 과적운행에 대한 단속 관련법(도로법-건설교통부, 도로교통법-경찰청)이 상존하고 있는 바, 경찰에서는 장비 미구입 등의 이유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최대 400만원(양벌)의 벌금의 막중한 업무에 비해 단속요원이 주로 공익요원과 청원경찰로 구성 책임성, 사명감이 미흡하여 비효율적인 상황임.</p> <p>이에 사법권이 있는 경찰로 단속의 일원화를 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3. 과제내용	화물자동차 과적운행 단속의 일원화 추진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교부 : 사법권이 있는 경찰에서 단속원함</li> <li>○ 경찰청 : 장비 미구비 및 인력부족으로 반대</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자동차 과적운행 예방대책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자·장소 : 2002. 1. 25. 안전관리개선기획단(206호)</li> <li>- 참석 기관 : 건교부, 경찰청, 해양수산부(항만의 과적행위), 서울시, 인천시</li> <li>- 안건 : 화물자동차 과적운행 예방대책 마련</li> </ul> </li> <li>○ 단기적(일원화 이전)으로 보다 효율적인 단속계획 수립·시행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단속의 이원화(건교부, 경찰청)를 사법권이 있는 경찰로 단속의 일원화 추진계획</li> <li>○ 국내·외 출장을 통하여 합리적인 단속체계 결정 및 조정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계획 : 국내 -5월 중, 국외 - 7월 중</li> </ul> </li> <li>○ 화물자동차 과적운행의 효율적인 예방대책안 마련 및 조정</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적인 상황 파악 후 관련법령 및 단속체계 개선 추진 계획</li> </ul>

1. 과 제 명	황사대책 추진체계 및 예·경보 시스템 구축
2. 발굴배경	황사발생 일수 증가 등에 따른 정부종합대책 수립·시행 필요 * 황사발생일 : 80년대 3.9일, 90년대 7.7일, '01년 27일, '02년 14일(4.30현재)
3. 과제내용	○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체계 확립 ○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은 황사 예·경보체계 구축
4. 이견내용 (문제점)	○ 황사피해 최소화 종합대책 -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이 외교부·환경부·기상청 등 기관별로 추진 ○ 황사 예·경보체계 업무분장범위 불분명
5. 조정경과	○ 황사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차관회의 개최('02. 3. 25) - 국무조정실장 주재, 교육·행자·환경·외교 등 9개 부처청 차관 참석 ○ 황사대책 실무위원회 2차 개최('02. 3. 27, '02. 4. 10)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부단장 주재, 10개부처청 과장 참석
6. 조정결과	○ 황사종합대책 수립·시행 - 환경부 주관으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3. 26, 국무회의보고) - 황사농도에 따른 초등학교 등 휴업기준 마련·시행 - 황사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행동메뉴얼 작성·배포 및 홍보 ○ 황사대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환경부주관) ○ 황사대책 예·경보체계 구축 - 황사에·경보의 이원화 체제(예보·기상청, 경보-환경부)를 기상청으로 일원화( * 황사경보제는 3. 26 회의결과에 따라 '02년도에 환경부에서 최초 도입) - 황사에·경보체계 구축 사업(선도관측망 및 장비확충)에 필요한 예산은 재해대책예비비로 지원

1. 과 제 명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 제도화
2. 발굴배경	최근 10년간 항공기 사고 중 헬기 사고가 64.2%를 차지하고 '01. 5~7월간 헬기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헬기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대책 추진
3. 과제내용	헬기 보유기관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통합조정기능 강화, 헬기 운항종사자의 자격관리 및 안전교육 개선, 헬기 운항환경 개선, 안전관리 및 임무관리제도 개선 등
4. 이견내용 (문제점)	○ 기획단·건교부 정부 및 지자체 보유헬기의 항공법상 의무등록 및 감항검사 등 실시 ○ 행자부·산림청 등 헬기 보유기관별 자체 안전관리
5. 조정경과	○ 헬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01. 7. 9) ○ 헬기 안전운항 대책 연구용역 실시('01. 7~9) ○ 헬기 안전관리대책 실무준비단 구성·운영('01. 12~'02. 2) ○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02. 3. 22) -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 확정 및 이행방안 협의 ○ 헬기 안전관리 종합대책관련 부처별 세부시행계획 수립('02. 4. 30)
6. 조정결과	○ 군, 경찰을 제외한 행자부(소방),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보유 헬기에 대한 항공법상 의무등록 및 감항검사 등 안전이행 의무화 ○ 항공법령 개정시 조종사 및 정비사 자격관리 강화 등 동 종합 대책 내용 검토·반영 ○ 항공법령 개정이전에는 동 종합대책의 내용을 기관별 자체규정에 포함시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 자체 안전관리 추진

1. 과 제 명	가스자동차 안전관리에 대한 부처별 안전관리 업무조정
2. 발굴배경	근래 LPG자동차의 보급증가에 반해 LPG자동차 정비(폐차)업소에서 의 안전관리미흡으로 인한 가스폭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유사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관련규정 강화
3. 과제내용	LPG자동차 정비·폐차업소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 관리법 개정을 위한 소관부처 지정 및 개정내용 검토 및 조정
4. 이견내용 (문제점)	<p>&lt;건교부&gt;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자동차의 LPG시설을 점검·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2종의 시공업을 등록후 점검·정비토록 되어 있으나 모든정비업소에서 자동차의 가스시설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 취급안전과 관련한 법률의 위임없이 시·도조례에 반영토록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p> <p>&lt;산업자원부&gt; 가스관계법에서 정하고자 할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야 하므로 자동차 관리법과의 2중규제 문제 등 입법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입법과정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안전관리 공백 우려</p>
5. 조정경과	<p>○LPG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한 관립법령정비 관계기관회의 개최('02.4.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개선기획단 부단장 주재</li> <li>- 건교부, 산자부, 법제처, 서울특별시 등 담당과장 참석</li> </ul>
6. 조정결과	<p>○ 가스자동차 가스용기 관리부실로 인한 가스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에 관한 시·도 조례를 개 정하여 가스자동차 정비(폐차) 작업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을 마련키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교부에서 동 조례 개정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도 조례를 개정토록 조치</li> </ul>

1. 과 제 명	긴급 신고전화 일원화 추진
2. 발굴배경	○ 유관기관의 사업참여 회피로 사업지연 : 행정자치부에서 조정 신청
3. 과제내용	○ 국민들이 전기·가스·환경관련 사고 발생시 어느 곳으로 신고할지 몰라 신고가 늦어져 대형사고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구조구급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환경관련 사고 발생시에도 「119」를 이용할 수 있는 『재난관련 신고전화 119 일원화』대책을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하고 있으나 ○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존 특수번호 폐지를 우려한 유관 기관의 사업 참여 회피로 추진지연
4. 이견내용 (문제점)	○ 행정자치부 - KT(한국통신)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유관기관의 참여회피로 장비납품기한 초과등 사업추진 지연 ○ 유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환경부) - 기존의 특수번호(전기123, 환경128)에 대한 존폐여부에 대한 기준제시 후 사업참여
5. 조정경과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주관 관계기관 회의(부단장 주재)를 개최 하여 추진 방안 최종확정(2002. 4. 3)
6. 조정결과	○ 금년 7. 1부터 재난관련 긴급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는 『재난 관련 신고전화 119 일원화대책』 전면시행 ○ 기존특수번호(전기123, 환경128)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병행사용 후 변경여부 검토

1. 과 제 명	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범위 확대
2. 발굴배경	○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동향보고와 관련 조정과제 발굴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백화점, 학원,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특수건물)의 증가와 더불어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나</li> <li>○ 이들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 규정이 느슨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범위 확대필요</li> </ul>
4. 이견내용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상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을 연면적 3,000㎡이상에서 1,000㎡이상 건물 및 전체 아파트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li> </ul> </li> <li>○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완화 추세와 기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및 안전점검 대상 증가에 따른 화재보험협회의 인력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시설주의 자발적인 보험가입 유도가 바람직</li> </ul> </li> </ul>
5. 조정경과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주관 관계기관 회의(부단장 주재)를 개최하여 조정(2002. 4. 16)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범위확대는 국민부담에 비하여 실익이 적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li> <li>○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하여는 상반기중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적으로 분야별 차등적용기준을 마련·시행</li> </ul> </li> </ul>

1. 과 제 명	가스 안전관리 기준강화 관련
2. 발굴배경	○ 인천 다가구주택 가스폭발사고 등 계기로 가스사고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필요성 대두
3. 과제내용	○ 신규건축물 가스안전검사필증 첨부 의무화 ○ 연면적 100㎡이상 기존건축물 안전검사필증 첨부 의무화 ○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의무화 ○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체결 ○ 도시가스로 전환시 기존LPG시설 철거 법제화
4. 이견내용 (문제점)	○ 행정자치부 - 연면적 100㎡이상 기존건축물 및 신규건축물 안전검검필증 첨부 및 가스누설 자동차단기 설치 의무화 - 단란주점등 영업허가 신청시 도시가스시설에 대하여도 안전검 사필증을 첨부토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명시 ○ 산업자원부 - 연면적 100㎡이상 기존건축물 현황 파악이 곤란하고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여 추진곤란
5. 조정경과	○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주관 관계기관 회의(부단장 주재)를 개최하여 조정(2002. 4. 19)
6. 조정결과	○ 건축허가시 검사필증 첨부 의무화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에서 관계법령상의 근거를 마 련하고, 건축법령에 첨부 의무화 추진 ○ 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의무화는 비용부담이 과다하므로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비교적 저렴한 휴즈콕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도시가스로 전환시 기존 LPG시설을 도시가스 시공자가 의무적으 로 철거토록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6조)에 근거 마련 등



1. 과 제 명	위험물질 운송관련 안전관리 강화
2. 발굴배경	위험물 운송차량 안전관리 점검결과 가스·유류·유해 화학물등 위험물질의 유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운송관련 안전관리가 허술함에 따른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마련 필요
3. 과제내용	위험물질 운송관련 안전관리개선대책 마련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 건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질 운송관련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제정 추진</li> </ul> </li> <li>○ 환경부,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법 제정시 소관부처의 혼선 등을 이유로 각 개별법에서 관련 안전규정을 제정</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관리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검기간 : 2002. 4. 22(月) ~ 26(金) 5일간</li> <li>- 점검대상 : 전국 월드컵개최 10개 도시 및 22개 유관기관</li> </ul> </li> <li>○ 위험물질 운송관련 안전관리개선 관계부처 회의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02. 6. 7(수) 15:00~16:30</li> <li>- 참석 : 행자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담당과장</li> </ul> </li> </ul> <p>⇒ 우선 각 개별법에서 규정·관리하고, 장기적으로 특별법제정 방안 강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부처에 회의결과 통보(6.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소관 부처별 안전관리개선계획 수립 추진</li> </ul> </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물질 운송관련 부처별 안전관리개선 추진계획 수립</li> <li>○ 각 부처별 추진계획중 부처이견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li> </ul>

1. 과 제 명	신종 자유 이용업 안전관리대책 추진
2. 발굴배경	신종자유업종의 안전관리 개선관련 소방 및 건축분야의 관련 법령 정비는 정상추진되고 있는 반면, 영업신고제도 도입등 소관 부처의 각 개별 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향후 안전관련 법령의 시행시 많은 부작용 발생우려
3. 과제내용	신종 자유 이용업에 대한 소관부처의 조속한 안전관리 대책마련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자유업종의 안전관련 소방 및 건축분야의 관련 법령 시행시 개업전 현황파악 곤란으로 법령 시행에 애로</li> </ul> </li> <li>○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업종의 안전관리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중으로 소관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조속 마련 곤란</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종업종의 소방안전 일제 안전점검 실시(2000. 5월)</li> <li>○ 안전관리대책 마련 철저 및 추진상황 제출통보('00. 8월)</li> <li>○ 신종자유업종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관련 회의개최('01. 12. 11)</li> <li>○ 신종자유업종에 대한 소관부처 지정통보('02. 1. 14)</li> <li>○ 화상대화방 소관부처 지정 재검토 요청(문광부, '02. 1. 29)</li> <li>○ 화상대화방 소관부처 지정 재검토를 위한 회의개최('02. 3. 22)</li> <li>○ 추진실태 및 추진계획 파악을 위한 회의개최('02. 6. 17)</li> </ul>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소관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업종에 대하여 신고업 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li> <li>○ 안전관련 법령 소관부처(행자부, 건교부) 등에서는 신종 자유업 실태파악을 위해 우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자료를 활용하고 건축·소방시설 설치관련 사항에 대한 대 국민 홍보실시</li> </ul>

1. 과 제 명	산림청 충청권 헬기격납고 설치관련 이견조정
2. 발굴배경	○ 산림청의 충청권 산불진화를 위한 헬기격납고 부지선정 지역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에 대하여 인근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과 격납고 설치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부동의 함에 따라 당 실로 조정요청
3. 과제내용	산림청의 충청권 헬기격납고 설치와 관련하여 헬기 안전확보 및 산림청과 국방부 (공군)간 이견조정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 · 충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납고에서의 이 · 착륙 방향 · 고도를 상호 협의하에 설정 하고, 비행장과 교신을 유지하는 등 비행규칙 준수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음(필요시 공군에서 비행승인 및 통제)</li> </ul> </li> <li>○ 국방부(공군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군헬기 훈련공역 입 · 출항 경로 상공에 위치하여 군 헬기 의 자유로운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며, 신축 격납고에서 이륙/상승할 때 경계 사각지대에 들어 공중충돌 가능성 및 통신이 상이하여 공중경계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불가</li> </ul> </li> </ul>
5. 조정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기관 회의개최(안전관리개선기획단 부단장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02. 7. 18(목) 15:00~16:00</li> <li>- 참석 : 국방부(공군본부), 산림청, 건교부, 충북도 담당과장</li> </ul> </li> <li>○ 관계부처에 회의결과 통보(7.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기관별 소관업무 관련사항 추진토록 통보</li> </ul> </li> </ul>
6. 조정결과	○ 헬기 입출항 방향 · 고도, 상호교신방법 등 모든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 산림청과 공군간 협정서를 만든 후 시설작업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동 지역에 격납고 설치합의

1. 과 제 명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어</li> <li>○ 여건이 비슷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어린이 보호에 취약</li> </ul> <p>※ 자체발굴 과제</p>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추가함</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의 경우 대부분 자가용에 의한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고,</li> <li>-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예산부족 등으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 현재 규정대로 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li> </ul> </li> <li>○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등 보육시설이나 여건이 비슷한데도 이를 제외시킨 것은 불합리하고,</li> <li>- 보육시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확대 필요</li> </ul> </li> </ul>
5. 조정경과	관련기관 회의를(6.22, 8.3, 10.15) 통해 조정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보육시설까지 확대하되</li> <li>○ 이를 위해 현재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결과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기로 조정완료</li> </ul>

1. 과 제 명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제도 등 개선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이 학교·보육시설·학원의 등록(신고)한 차의 명의로 된 차에 한정되어</li> <li>○ 지입제, 자가용임차, 렌트, 전세버스는 신고할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음</li> </ul> <p>※ 자체발굴 과제</p>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중 등록명의를 도로교통법에서 삭제하되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되는 모든 차에 대하여 신고의무화 추진</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상 신고요건중 등록명의 삭제 및 전차량 신고의무화를 추진하되,</li> <li>-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li> </ul> </li> <li>○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교통법상 신고요건중 등록명의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 문제가 없으나</li> <li>-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반대</li> </ul> </li> </ul>
5. 조정경과	관련기관 회의를(11.26) 통해 조정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중 등록명의 삭제 및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하되,</li> <li>○ 유상운송 허가요건의 완화방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기관간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도출</li> </ul>

1. 과 제 명	교통법칙금의交通安全시설 재원화 추진
2. 발굴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7.4명으로 OECD국가중 최하위이나交通安全에 투입하는 재원은 부족한 실정</li> <li>※ '99년도 지방도로에 대한 교통사고찾은곳 개선사업 진척률은 52.9% (설계 3,482개소에 공사 1,843개소)로 나타남</li> <li>○ 교통법칙금은 국가가 교통법규 위반자로부터 거두는 것으로交通安全시설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li> <li>※ 안전관리 종합대책 과제로 선정</li> </ul>
3. 과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일반회계 재원인 교통법칙금을 특별회계로 편입,交通安全사업에 투자</li> </ul>
4. 이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행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법칙금 투입으로 늘어난 자특회계 재원을交通安全시설 및 교통사고찾은곳 개선사업 등에만 한정 사용</li> <li>- 동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로交通安全시설에도 국고 보조</li> </ul> </li> <li>○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칸막이식 운영방지를 위해 지속 추진해 온 특별회계 정비방침과 상이하므로 입법안 반대</li> <li>-交通安全시설의 설치·관리는 지자체 고유업무로 비용부담은 당연히 지자체에서 부담할 사항이므로 국고보조 반대</li> </ul> </li> </ul>
5. 조정경과	<p>관련기관 회의(4.9)를 통해 조정</p> <p>※ 11.26 국회 행자위에서 협의 완료</p>
6. 조정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자부·경찰청 및 우리실 조정의견을 기초로 기획예산처 의견 반영, 11.26 국회 행자위(안) 확정</li> <li>○ 2001. 12. 20 국회에서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개정 의결(2003년부터 시행)</li> </ul>